

한림국제대학원대 대만연구소-코리아연구원 공동 학술 세미나

대만과 동아시아 공동체

일 시 | 2009년 10월 15일(목) 14:00~18:30
장 소 | 한림국제대학원대 한림1관 한림홀
주 최 | 코리아연구원(www.knsi.org),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대만연구소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세미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코리아연구원(KNSI) 연구기획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축사를 해주신 대만대표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1992년 한·중 수교, 그리고 한·대만 단교 이후 17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과 대만의 인적, 물적 유대관계 및 성과는 급속히 희박해져 가는 상황입니다. 반면 대만은 한국의 대외관계와 동북아 지역 내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한 존재로, 오늘날 정부 간 교류가 약화된 상황에서 학술 연구 등 민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한 한·대만 간 관계증진의 필요성은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교에서는 대만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양안관계 및 동북아 역내 주요 국가 상호간 혹은 대만과의 관계를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중화권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장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대만 지역전공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대만과 동아시아 공동체” 세미나 역시 이의 연장선에서 대만을 동아시아 공동체의 일원으로 재발견하는 기회를 위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 속의 대만을 새롭게 인식하여 향후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한·대만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과 대만 상호간 연구 및 인적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전문가,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드리며, 보다 활발하고 열띤 토론을 통해 향후 한국 내 대만과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을 더욱 활성화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대만연구소장 최지영 드림.

PROGRAM

사회 | 백영서 / 연세대 사학과

사전 행사 (2:00~2:30)

개회사 최지영 / 대만연구소장

축사 조배림 / 대만대표부 문화조 참사관
박순성 / 코리아연구원 연구기획위원장

제 1 세션 (2:30~4:00)

발표 1 “대만의 동아시아, 그 부재 속의 가능성”
백지운 /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발표 2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타이완의 시각”
윤상우 / 강원대 사회학

토론 임우경 /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주장환 / 한신대 중국지역학과

제 2 세션 (4:15~5:30)

발표 3 “대만 시민사회의 성장과 그 구조적 한계: 동아시아 시민사회와의 연대는 가능한가?”
박윤철 / 호서대 중어중국학과

토론 지은주 / 고려대 평화연구소

종합토론 (5:30~6:30)

목 차

제 1 세션 (2:30~4:00)

- 발표 1 “대만의 동아시아, 그 부재 속의 가능성” 5
백지운 /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 발표 2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타이완의 시각” 19
윤상우 / 강원대 사회학

제 2 세션 (4:15~5:30)

- 발표 3 “대만 시민사회의 성장과 그 구조적 한계: 동아시아 시민사회
와의 연대는 가능한가?” 41
박윤철 / 호서대 중어중국학과

대만의 동아시아, 그 부재 속의 가능성

백지운 / 인하대 한국학 연구소

- I. 대만에 동아시아가 있는가
- II. 대만의 딜레마, 동아시아
- III. 민족, 포스트국족, '중국인'
- IV. 양안/분단 체제와 동아시아

I. 대만에 동아시아가 있는가

한국의 중국사학자 백영서는 일찍이 “중국에 아시아가 있는가”를 물은 적이 있다. 20세기 초 문명론이나 지역연대론의 축으로 ‘아시아’가 제출되었음에도 결국 중국이라는 국민국가로 환원되어버리는 과정을 비판한 그의 글¹⁾은, 단지 역사 분석을 넘어 오늘날 여전히 동아시아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는 중국 지식계에 대한 질타의 뉘앙스를 담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창비’ 그룹을 통해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지식담론으로 제기된 동아시아론이 각 학문분과들과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며 국내외 지식 담론 속에서 연진해 왔음에도, 유독 중국 지식인들과의 대화에는 어려움이 있어왔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역시 중국인의 중화주의적 우월감으로, 글로벌시대 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에 전통시대의 문명적 우월감이 겹쳐지면서 동아시아의 이웃나라들을 공존을 위한 동반자로 좀처럼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는 근대 이래 중국인의 사유 속에 고질적으로 자리하는 중-서

1) 백영서, 「중국에 ‘아시아’가 있는가?: 한국인의 시각」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비, 2000.

이분법적 사유구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를 중국과 서구의 대결구도로 보는 중국의 이원론적 사고의 발생 조건과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궁구가 필요하겠지만 아편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냉전을 거치며 공고화되었다고 정리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하다. 서구에 대한 오랜 피해의식은 중국인의 ‘중심 콤플렉스’를 형성하는 데 일조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는 사실상 있어도 보이지 않는 부재의 땅이 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이라는 국가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안으로는 수많은 소수민족을 거느리고 밖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화인사회와 연동되어 있는 중국은 근대국민국가라는 정체(政體)에도 불구하고 제국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국민국가-제국이라는 이중성에서 연유하는 중국의 제국적 멘탈리티는 동아시아 인접국을 대하는 데도 직간접적으로 작용하는데, 어쩌면 이야말로 중국인의 사유 속에 동아시아가 객관적 거리를 지닌 타자로서 좀처럼 감지되지 않는 근본 원인인지 모른다.

대만에서 동아시아적 시야의 불/가능성을 논하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상황을 언급한 이유는 양자가 연속/단속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대만이 동아시아를 좀처럼 사유의 틀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역사적·현실적 조건에는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가 근원적인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비단 전자가 후자로부터 받는 위협이나 종속성 탓만은 아니다. 형식적으로 국민국가의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대만이 동아시아를 거론하는 것은 사치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중국과는 또 다른 제국의 중심을 꿈꾸는 상상들이 대만 학계에 비등하는 현황에도 보이듯,²⁾ 대만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위협에 휩쓸리면서도 동시에 중국의 제국상상을 모방 혹은 재생산하는 이중성을 지닌다. 대만 역사학계에 심심치 않게 제출되는 ‘해양입국론’이나 ‘동심원사관’ 등이 복제하는 제국상상에 대해, 천 광성(陳光興)은 “구 제국주의가 구축한 문화상상이 여전히 피식민자의 상상공간을 제어”(57)하여 대만과 같은 신흥 제3세계 내의 ‘하위’제국주의를 구축하는 동시에 대만 국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³⁾ 대만에서 발견되는 국족주의-하위제국의 문화상상을 식민자에 대한 모방을 통해 자아를 재구축하는 포스트콜로니얼의 문화-인식 구조 속에서 분석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대만의 제국상상의 근원에는 물론 일본이나 서구에 의한 포스트콜로니얼(postcolonial)적 요인이 있겠지만, 중국의 향중심주의와도 관계되어 있는 것 아닐까. 이를 테면, 1990년대 본토주의자들의 ‘남진담론’은 단순히 중국 대륙의 ‘서진’을 견제하는 것을

2) 백영서, 「대만에게 동아시아론은 사치?」 서남통신, 2007.9.27; 백영서, 「自國史와 地域史의 疏通: 동아시아인의 역사서술의 성찰」 『역사학보』 196집, 2007, 108-109면 참조.

3) 陳光興/백지운 외 역, 『제국의 눈』 창비, 2003, 35-110면.

넘어, 중심의 위치를 잃어버린 데 대한 상실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만 국족주의는 국민당의 대중국주의 이데올로기와 쌍둥이형제”(천, 83)라는 천 광성의 지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대만 민족주의와 중국 중화주의의 본원적 쌍생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대만 민족주의는 국민당 시절 억압적인 중화민족주의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의 모방이자 연속인 측면이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대만에서 동아시아적 시야가 원천적으로 부재하는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II. 대만의 딜레마, 동아시아

대만 학계에서 동아시아를 사유 틀로 제기하는 학문적 주장은 그동안 거의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아시아 유교에 대한 약간의 논의 외에는 ‘대만사회연구계간’ 그룹의 천 광성이 거의 유일하다. 이처럼 대만에서 동아시아적 사유가 부재해온 원인을 대만 학자 장 쿤장(張崑將)은 중국이라는 “슈퍼 타자”의 존재에서 찾았다. 그는 서구학계와 대만사회에 퍼져있는 ‘중국위협론’을 단순논리라 비판하면서 민진당의 탈중국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대만 사람들이 자신을 대만인이자 중국인이라는 이중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있음에 주목한다. 중국에 대한 ‘동일시(近鄉)’와 ‘두려움(情怯)’이라는 양자가 오늘날 대만 사람들의 이율배반적인 중국의식을 이루고 있으며 그것이 동아시아와 중국 담론의 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진단을 기초로, 그는 오랜 피해자의식을 극복하고 정치보다는 문화적·민간적 차원에서 중국과 대화를 지속함으로써 대만에서의 동아시아론을 진전시키자고 주장한다.⁴⁾

장 쿤장의 이 글은 대만사회에서도 이제 동아시아적 시야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서 주목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대만 지식인으로 하여금 반세기 이상 눈감았던 동아시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일까. “대만이 이탈한 지 오래된 ‘동아시아’의 궤도로 되돌아가 ‘동아시아’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할 때, 동아시아도 비로소 대만의 존재를 발견할 것이다”(장, 196)라는 문장에서 보이듯, 그것은 우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 대한 불안감에 기인하는 것 같다. 물론, 대만의 고립상태는 1971년 유엔 퇴출 이래 지속되어왔지만, 지금 시점에서 체감되는 의미는 또 다르다. 1980년대 이래 싹트기 시작한 대만민족주의는 2000년대 민진당의 공격적인 탈중국화 정책을

4) 張崑將, 「如何從臺灣思考東亞」『思想』3호, 2006, 181-201면.

거치며 대만사회의 폐쇄성을 강화해왔다. 분리주의가 아직도 절대다수의 민심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대선에서 국민당이 정권을 탈환하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만을 정치·경제면에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킨 민진당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적지 않다.

비슷한 전환이 문학연구 영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대만문학 연구의 원로이자 대독과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천 광밍(陳芳明)은 최근 어느 글에서 대만문학연구가 직면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서 ‘중국공포증(sinophobia)’과 ‘외국공포증(xenophobia)’의 극복을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공포증’은 지난 몇 십 년간의 “과도한 본토화”에서 비롯된 것이고 ‘외국공포증’은 자문화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에서 연원한다.⁵⁾ 말하자면, 이 두 공포증은 민진당 집권 이래 증폭한 대만민족주의가 사실상 자문화에 대한 열등감과 표리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언급은 대만 ‘포스트식민성’에 대한 천 광밍의 관점의 전환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사실 현실은 정 반대로서, 식민지의 경험은 우리에게 귀중한 입장을 제공하며 식민지가 산생한 계시는 현재 이미 인류 지식 경험의 보고가 되고 있다. 백인이든 제국이든 모두 자신의 야만적 면모에 직시하게 될 것이다. / 식민지 지식은 분명 그들의 거울이 되었다. 최근 몇 년 식민지를 주제로 글을 쓴 적지 않은 작가들이 노벨문학상을 획득했다. 일례로 인도의 나이폴의 『수수끼끼의 도착』은 인류문화의 귀중한 공동자원으로 칭할 만한 것이다.⁶⁾

1990년대 후반까지 천 광밍은 대만사회가 리덩후이가 집권한 1989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포스트식민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1895년에서 1945년까지의 일본 식민에 이어 1987년까지를 중국(국민당)에 의한 제2의 식민기간으로 규정했던 그는, 지난 100년간 잃어버린 언어와 기억을 회복하는 것이 포스트콜로니얼의 주요 과제라 주장함으로써 대만민족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다.⁷⁾ 이로 보건대, 식민지의 경험을 자신의 문화유산으로 받아들여자는 내용의 위 인용문은 천 광밍의 사유에서 거대한 전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러한 전환은 그동안 배척해온 중국(현대)문학을 대만문학의 유산으로 받아들여거나 적어도 대화의 대상으로

5) 陳芳明, 「東亞作為一種方法」『臺灣文學的東亞思考』行政院文化建設委員會, 2007, 12면.

6) 陳芳明, 같은 면.

7) Fang-ming Chen, 'The problems of constructing Taiwan's postcolonial discourse' paper delivered in Writing Taiwan Conference, Columbia University, 30 April-3 May 1998, Ping-hui Liao, "Postcolonial studies in Taiwan: issues in critical debates," *Postcolonial Studies*, vol2, no.2, 1999 pp.206-207에서 재인용.

인정하자는 전향적 제안으로 이어진다.

루 쉰 외에도 나는 ‘중국신문학’에 관한 대만문학의 연구를 통해 대만문단이 어떻게 위 다푸, 선 총원, 쉬 즈모 나아가 랑 스치우를 흡수했는지를 기쁘게 보고 있다. 한 작가의 문학생애를 관찰하는 데는 전체적 맥락이 바탕이 되어야지 임의로 잘라내어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 (중략) 우리는 중국을 제대로 정시해야 할 때에 이르렀다. 우리에게 자기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배척할 필요가 없다.⁸⁾

바로 이 지점에서 ‘동아시아적 시각’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과거 대만문학이 중국신문학을 배제했던 심리 저변에는 대만(문학)이 어디에 속하느냐라는 정체성 시비가 작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아시아라는 시야에서 대만문학을 보게 되면 이처럼 ‘대만문학이 어느 신성한 영역의 일부인가’라는 소속문제를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천, 13). 여기서 동아시아는 “동아시아 및 서구 식민사의 재인식”(천, 14)이라는 큰 틀에서 대만문학의 위치를 가늠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그런데 천 광밍이 대만문학에 동아시아적 시야를 끌어오는 근본적인 동기에는, 앞서의 장 쿤장이 그렇듯 고립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다. 대만문학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제한되어 있고 “아무도 우리와 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만족적인 학문” 연구에 안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천, 9). 말하자면, 대만문학이 세계문학의 지평 위에 자신의 위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립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문학과 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동아시아라는 범주가 소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대만의 동아시아로의 회귀에는 매우 복잡한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얽혀있다. 중국과 일본 어디에도 귀속되지 못한 채 일본과 대륙 등지를 떠돌다 결국 광인이 되고 마는 후 타이밍(胡太明)의 삶을 그린 우 쥬류(吳濁流)의 『아시아의 고아』(1946) 이래, ‘고아의식’은 대만의 실존적 위기를 대표하는 용어가 되어왔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극성을 부렸던 대만민족주의는 뒤집어 보면 이 고아의식의 또 다른 발현에 다름 아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과의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바로 이러한 세를 타고 오랫동안 부재했던 동아시아가 대만 지식담론에 출현하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만에서 동아시아 담론은 중국 담론과 떼려야 뗄 수 없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8) 陳芳明, 앞의 글, 13면.

III. 민족, 포스트국족, ‘중국인’

양안문제와 동아시아가 한 데 얽혀있는 특성으로 인해 대만 지식담론에 동아시아의 출현은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즉, 한편으로 그것은 지역의 평화공존이라는 큰 틀에서 국내의 소모적인 민족갈등에 풀어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다른 한편 양안관계에 편중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을 고르게 보는 균형감각을 결할 우려를 안고 있다. 그러나 통/독의 정치싸움이 거의 사회 전체를 양분하고 있는 대만으로서 양안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편협한 민족주의 논쟁으로 곤두박질하는 양안논의를 생산적 토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양안에 제한된 이원론적 사고틀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적 시야가 중요해지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그런 면에서 주목할 만한 시도가 올해 대만 지식계에 있었다. ‘대만사회연구’ 창립 20주년 기념호에, 기획자 천 광성의 모두논문을 포함한 네 편의 주제논문과 여섯 편의 토론문으로 구성된 ‘분단체제극복’ 특집이 기획된 것이다. ‘분단체제’란 한국 학자 백낙청이 1990년대 초반에 제출한 것으로, 한반도의 분단을 근대 세계체제의 일환으로 보되 “특정한 시기와 동아시아라는 특정 지역에 자리 잡은 독특한 하위체제”⁹⁾로서 인식하기 위한 방법론적 개념이다. 한국의 사회운동 담론에서 그의 분단체제론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 하나는 운동의 두 축을 접해온 NL과 PD의 급진주의를 반성적으로 지양하면서 민족통일과 민주변혁이 사실상 하나의 과제라는 인식을 제시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분단체제의 극복이 단순히 한반도 내부의 과제가 아닌 근대 자본주의체제를 극복하는, 세계사적 의미를 띤 운동의 일환이라는 시야를 열었다는 것이다.

백낙청이나 천 광성 모두가 인정하듯, 한반도의 분단과 양안의 분단은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단을 안으로는 사회의 민주 발전을 제약하고 밖으로는 근대 자본주의세계체제의 모순을 유지, 강화하는 하나의 ‘체제’로 보는 이 관점이, 중국과의 오랜 대치 속에 사회 분열이 가속화된 대만의 난국을 돌파하는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천 광성이 가장 답답해하는 대만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는 정치담론과 민간담론이 좀처럼 구별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필경 국민당과 민진당 간의 ‘당쟁’에 불과한 성적(省籍) 논쟁에 지식계를 포함한 대만 사회 전체가 휘말림으로써, 정치담론으로부터 자율적인 민간담론의 공간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분단체제의 과제를 국가 간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민중의 일상적

9) 백낙청,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1992)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17-18면.

차원의 변혁운동으로 끌어올리는 ‘분단체제론’의 시각은, 양안문제를 협소한 민족주의 논쟁에서 벗어나 대만사회의 민주변혁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 평화로 까지 연결시켜 사고하는 시야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이나 천 광성의 논의가 국가를 전적으로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다. 분단체제의 초극은 “정치적 기획인 동시에 지적 프로젝트”이다.¹⁰⁾ 다만,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마찬가지로 양안의 ‘분단체제’가 진작부터 흔들리고 있는 지금(천, 38), 국가와 적극적으로 교섭하되 그것을 비판적으로 견제하는 민중 주체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담론 지평이 긴질히 요구되는 것이다.

문제는 대만에서 ‘분단체제’ 극복의 의제가 중국과의 통일이라는 민감한 정치적 이슈를 건드리고 있어 쉽게 민간담론으로 파고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분단체제의 분석과 초극의 토론이 필연적으로 양안의 통일을 지향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대만 지식계가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른다. 이에 대해 천 광성은 “통독의 문제를 고립시키기보다 사회 민주와 제국주의 및 자본주의의 극복이라는 맥락 위에 둘 때 더 큰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통일이나 독립이나를 궁극적 목적으로 둘 것이 아니라, 대만 사회의 자주와 탈제국, 자본주의 착취의 해소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자는 것이다(천, 36-37). 이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모순들을 훨씬 깊고 다양하게 체현하”는 한반도 분단체제를 극복하자는 운동이 “세계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주장한 백낙청¹¹⁾과 일맥상통할뿐더러 탈식민, 탈냉전은 탈제국과 동시에 이루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천 광성의 이론¹²⁾과도 통한다.

분명, 양안체제에 관한 토론이 협소한 민족주의 담론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대만-중국의 이원론을 넘어 근대세계체제의 극복이라는 거시적 시야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중국의 문제를 건너뛰고 곧바로 대만과 세계를 직결시킨다면 그 또한 추상화의 오류를 면키 어렵다. 여기에 양안문제에 관한 중대한 딜레마가 발생한다. 소모적인 민족논쟁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중국-대만의 이원론을 넘어서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토론으로 진입할 수 없으니, 여기서 다시 중국-대만의 이원론으로 빠져들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천 광성이 양안토론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라 할 ‘민족’에 천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양안문제의 딜레마 가장 심층으로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백낙청에게 “분단체제 극복 주체인 민중은 추상적 이론 개념이 아닌 지역 역사의 속성을 띤 것이며 이 점에서 필연적으로 ‘민족문제’

10) 陳光興, 「白樂晴의「超克“分斷體制”論」 『臺灣社會研究季刊』 74, 2009.6, 43면

11) 백낙청, 앞의 글, 33면.

12) 陳光興, 「세계화와 탈제국,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아세아연구』 52권 1호, 2009, 61면.

로 연결 된다”(천, 38)고 말함으로써, 천 광싱은 민족문제와 분단문제의 연결 지점에 착목한다. 그의 말처럼,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은 1970년대의 ‘민족문학론’의 연속선상에 있다. 초창기 ‘시민문학론’을 제기했던 백낙청은 이후 서구 부르주아지와 결부되어 있는 ‘시민’이 제3세계 민족을 설명하는 데 적절치 않다는 반성 속에서¹³⁾ ‘민족문학론’으로 전환한다. 1970년대 백낙청 민족문학론의 의미를 최원식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주목했는데, 첫째는 민족문학을 “제3세계 민족문학의 일익으로서 뚜렷이 규정”함으로써 “진정한 국제적 연대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 둘째는, 민족문학론이 “민중을 주체로 한 민주주의운동이라는 구체적 과제”로 연결시킨 점, 그리고 셋째는 민족문학론을 “인간해방운동의 한 형태”로 규정함으로써 “보편적 차원으로 들어 올리려는 이론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이다.¹⁴⁾ 이 셋은 사실 하나로 통한다. 민족문학론은 “기성 강대국의 이념에 따른 획일화를 거부하고 약소민족의 자결권과 자주성을 존중하는” 제3세계적 민중의 입장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이다.¹⁵⁾

“제3세계와의 강렬한 연대의식”(천, 17)을 지닌 백낙청의 민족 개념에 주목하면서, 천 광싱의 눈은 다시 대만을 향한다. 전후 국민당 중국민족주의의 억압과 이후 민진당의 대만민족주의의 재난을 모두 겪어온 대만사회에 또다시 민족을 불러들인다는 것은 일견 무모한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천 광싱은 ‘민족’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때문에 “역사를 상실한 주체”가 되어버린 오늘날 대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후 그것이 저야할 부정적 효과를 충분히 인지하”더라도 “민족이 존재해온 역사적 필요성”을 환기함으로써 “중국인이라는 역사의 중심(縱深)을 지닌 포스트국족의 주체위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천, 39). 여기서 그가 ‘민족’을 양안관계라는 상투에 갇히지 않는, 제3세계와의 횡적 연대를 담지 하는 개념으로, 다시 말해 ‘민족’을 동아시아적 틀에서 재구축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음을 분명히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 글뿐 아니라 이 기획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논쟁적인 의제인 “중국인의 문제화”(천, 39)가 제출되는 것이다.

대만의 일그러진 주체의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만인을 중국인이라는 정체성 바깥으로 배제하는” “반역사적”(천, 40) 오류를 극복해야 한다는 천 광싱의 주장은, 중국이라는 타자의 상을 통해 정체성을 구축해 온 대만사회에 대한 자기반성이자, 양안 민중의 교류의 역사로부터 담보상태에 놓인 양안문제를 전향적으로 돌파할 출구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중국인을 문제화하자”는 이

13) 백낙청, 「한국문학과 제3세계문학의 사명」 『민족문학과 세계문학2』 창비, 1985, 268면.

14) 최원식, 「민족문학론의 반성과 전망」 『민족문학의 논리』 창비, 1982, 364-365면.

15) 백낙청, 「제3세계의 문학을 보는 눈」 『민족문학과 세계문학2』 169-170면.

의제가 중국-대만의 이원론을 초월하려 할수록 그 내면으로 빠져들고 마는 양안문제의 딜레마의 경계선상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는 사실이다.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결합”이라는 제3세계론의 핵심을 바탕으로 하는 백낙청의 민족문학론¹⁶⁾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에도(천, 110-117), 그의 논의가 결국 “중국인”의 문제로 귀결되고 마는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공존이라는 “일견 모순에 찬 입장”¹⁷⁾으로서 민족문학론의 이중성을, 천이 제시한 “포스트국족”으로서의 “중국인”이 충분히 체현해낼 수 있을까. 바꿔 말하면 앞서 최원식이 정리한바 백낙청의 ‘민족’ 개념이 포괄하는 국제성(제3세계성)과 민중성, 그리고 보편성을 ‘중국인’ 개념이 어떻게 담보해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대만의 정체성을 재구축하자 모두논문의 문제제기는 다른 세 편의 주제 논문에서도 대체로 일관되게 전개되었다. 취 완원(瞿宛文)은 대만사회에 널리 유포되어있는 일본의 식민지근대화론을 비판하면서, 대만이 전후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데는 20세기 중화민족주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발전에는 ‘발전의 의지’가 중요한 축을 이룬다는 이론적 전제 하에, 중국과의 경쟁체제를 대만 경제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이는 대만의 경제를 중국을 포함한 하나의 “경제공동체”의 관점에서 보자는 결론으로 이어진다.¹⁸⁾ 한편, 역사문화 분야에서 정 홍성(鄭鴻生)은 ‘대만인’ 정체성의 허위성을 벗겨내었다.¹⁹⁾ 대만민족주의의 표상인 민난어가 사실 보통화보다 더 중국의 고언어적 성격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중국인이 수 천 년간 대혼혈의 과정을 겪어온 역사 들을 미시적으로 분석해나가면서, 그는 ‘중국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잡종적이고 비실체적인 개념으로서 오늘날 대륙이 ‘중국’의 대표성을 독점하는 상황은 친미반공의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근대적 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정, 116-128).

분단과 냉전체제 아래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된 대만인 정체성을 비판적으로 해체하는 이들 작업의 의미를 십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대만인 정체성을 해체하는 작업이 필경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되, 현실 중국을 피해가야 하는 대만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중국

16) 백낙청, 같은 글, 171면

17) 백낙청, 같은 글, 170면

18) 瞿宛文, 「臺灣經濟奇蹟的中國背景」 『臺灣社會研究季刊』 74기, 2009, 53-54, 83-90쪽 참조.

19) 鄭鴻生, 「臺灣人如何再作中國人」 『臺灣社會研究季刊』 74기, 2009.

(인)'은 한층 더 추상적인 정체성 관념으로 귀착되고 마는 것 아닌가. 이를 떼면, 대만인이라는 허위적 정체성을 해체하는 정 홍성의 논리는 결과적으로 '우리(대만)도 중국인이다'라는 것으로 귀결하는데, 여기서의 '중국인'은 물론 현재 대륙에 살고 있는 14억 인민이 아닌, 누구에 의해서도 “독점되지 않는”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중국인 정체성”(정, 132-133)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19세기 중국의 근대화민족운동 중 산생한 새로운 명칭”인 “중화민족”(정, 136)이다. 결국, 그의 “개방적 중국인”이란 단일민족의 상상을 해체하는 잡종성, 즉 20세기 초반 쑨 원(孫文)이 제시했던 오족공화의 현대적 버전에 근사한 것이다. 자오 강(趙剛)이 말한 “방법론으로서의 중국인”이나 닝 잉빈(寧應斌)의 “역사문화로서의 중국” 개념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들 개념이 단순한 전통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협애한 정치 대립과 역사 단절 하의 정체성을 초월하여 분단체제보다 더 높고 크고 빛나는 정정당당한 중국인 정체성”을 만들자거나²⁰⁾ “정치로서의 중국이라는 민족주의로부터 역사문화로서의 중국/중국인 담론을 구출하는 것이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방법”²¹⁾이라는 이들의 주장에는, 앞서 정 홍성의 “개방적 중국인”과 더불어,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애초에 천 광성이 백낙청의 ‘민족’ 개념을 기반으로 구상했던 ‘포스트국족’의 함의를 충분히 답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는 것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이들이 말하는 ‘중국인’ 개념의 추상성이다. 분단체제 극복의 토론이 양안 통일로 직결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천, 36) 대만의 담론 환경을 고려할 때 이들이 말하는 ‘중국인’이 현재 대륙에 살고 있는 구체적 실체로서의 중국인이 되지 못하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실체로서의 중국인을 논의의 자장 밖으로 배제한다면 그들이 애초에 비판했던 정체성 담론의 허위성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없다. 말하자면, 이들이 말하는 “개방적”, “방법적”, “역사문화적” ‘중국인’ 개념은 대만 정체성을 해체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막상 그것을 해체하고 나면 또 다른 수퍼-정체성 안에 다시 갇혀버리는 딜레마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중국인’ 개념이, 그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대륙의 관방담론 안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데 있다. 토론자 리 상런(李尙仁)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전통으로부터 자원을 끌어와 느슨한 정체성 개념으로 분단체제 극복의 주체를 구축하려 한다면, 제국으로부터 국민국가로 변신해온 중국의 역사적 과정을 재차 고구해야 한다.”²²⁾ 국민국가와 제국의 성격이 복잡하게 공존하는 대륙의

20) 趙剛, 「以‘方法論中國人’超克分斷體制」 『臺灣社會研究季刊』 74기, 2009, 150면.

21) 寧應斌, 「中國人如何再作中國人」 『臺灣社會研究季刊』 74기, 2009, 227면.

정치적·문화적 실상을 구체적 토론 대상으로 삼지 않은 채 ‘중국인’ 정체성 회복으로 논의를 집중한다면, 그것은 소수민족이나 대만에 대한 중국 관방의 입장과 근본적인 차별성을 얻기 힘들다. 분단체제 극복이 곧 통일을 의미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애써 현실중국을 배제한 것이 결과적으로, 의도한 것과는 정 반대로, ‘국공화해’라는 대륙의 통일담론으로 흡수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대만민족주의와 함께 중국의 제국적 국가주의 담론을 동시에 견제하는 균형 감각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양안문제 분석에서의 비대칭성’(리, 254)은 여러 가지 면에서 되새겨야 할 과제이다. ‘방법론으로서의 중국인’ 틀로 대만민족주의를 비판한다면 역으로 ‘방법론으로서의 대만인’으로 중국의 국가-제국주의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만 사회의 모순의 원인을 ‘냉전의 잔재’나 ‘친미반중’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리, 255), 중국 정부가 정치, 경제 각층에서 대만에 가해온 압력과 위협도 함께 문제 삼아야 한다. 나아가, 개혁개방 이후 중국사회의 정치·문화적 실상에 대해 대만의 지식계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왕 샤오밍(王曉明)은 최근 중국사회에 개인주의가 극도로 성행하면서도 ‘국가’ 개념은 오히려 강화되는 기이한 현상에 대해, 사회주의 30년의 공과에 대한 반성적 사고의 결락을 심각한 원인으로 지적했다.²³⁾ 마오시대 사회주의 기획에 대한 반성 속에서 오늘날 중국의 국가주의를 상대화하는 작업은 분단체제의 극복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따라서 전적으로 대륙 지식인들만의 몫은 아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타이셔(‘臺社’) 논자들의 분단체제 극복의 토론에 동아시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데 있다. 천 광성의 말처럼 분단체제의 분석을 위해서는 필경 ‘중국을 문제화’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을 문제화’하는 과정에 제3세계나 동아시아 같은 매개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논의는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자아-타자의 이원구조를 끝내 탈피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이원론은, 중국을 타자화함으로써 구축된 대만의 자아정체성을 비판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이 (현실중국에 대한 발언이 배제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중국인’이라는 수퍼-자아로 귀착하고 만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일원론이다.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천 광성이 주목했던바 “제3세계적 상상과 연대를 중요한 정신적 축”(천, 16)으로 삼았던 1970년대 백낙청의 민족 개념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관련하여, 분단체제론을 남한 혹은 남북한에 국한하지 않고 자본주의적 세계체제 속에서 보는 거시적 시야와 함

22) 李尙仁, 「回應臺社同仁的分斷體制論」 『臺灣社會研究季刊』 74기, 2009, 254면.

23) 王曉明, 「爲甚麼就不能烏托邦一下子?」 『臺灣社會研究季刊』 74기, 2009, 268-269면.

게 그 “구체화 과정에서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라는 중간 항에 대한 체계적 인식”²⁴⁾을 양안문제에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아시아를, 결코 자오 강의 우려처럼 “양안관계라는 특수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수사”(자오, 205)가 아닌, 자아-거울상의 이원론이라는 상상계로부터 탈주하는 계기로 받아들이는 전향적 사고가 중요하다.

IV. 양안/분단 체제와 동아시아

양안문제를 동아시아의 영역으로 끌어내자는 본고의 주장은 사실 ‘대만사회 연구’ 20주년 특집호 기획의 주제의식이기도 했다. 논의 전개 과정에서 동아시아가 소실된 점이 아쉽지만, 대만사회의 오랜 병통인 통독논쟁을 양안/분단 체제라는 거시적 시스템 속에서 접근하는 시야를 확보했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양안/분단 체제에 내포된 딜레마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진전된 논의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떠오르게 된 것도 소중한 성과이다.

그 첫째는 ‘제3세계론’의 역사적 의미와 한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분단체제 극복의 주체로서 백낙청이 제기했던 ‘민족’이나 타이셔의 논자들이 제출한 ‘중국인’ 개념의 의미와 한계를 짚는 작업과도 연관된다. 1970년대 백낙청이 제출했던바 안으로는 반제 반봉건의 요구에 부응하고 밖으로는 약소민족의 자주권과 자결권을 존중하는 제3세계적 자기인식과 결합하는 ‘민족(문학)론’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더불어, 1970년대 ‘민족문학론’과 ‘제3세계론’이 1990년대 이후 ‘분단체제론’과 ‘동아시아론’으로 차분히 확장된 한국의 상황에 비해,²⁵⁾ 대만에서 1970년대 ‘향토문학론’의 진영을 이끌었던 천 잉전(陳映眞)의 제3세계적 자기인식이 1980년대 이후 급격히 본토주의에 대체되고 마는 상황²⁶⁾이나 중국에서 1960년대 약소민족에 대한 우애로부터 출발한 제3세계론이 혁명수출론으로 변질, “중심 콤플렉스”를 배양하는 운상이 되어버린 맥락²⁷⁾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도 긴절하다. 양안문제의 토론에 동아시아가 좀처럼 개입하지 못하는 목전의 현상에 대해, 대만과 중국의 역사 속에 실

24) 백낙청,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 『분단체제변혁의 공부길』 34면.

25) 최원식, 「천하삼분지계로서의 동아시아론」(2004) 『제국 이후의 동아시아』 창비, 2009, 75면.

26) 呂正惠, 「戰後臺灣知識分子與臺灣文學」 『중국현대문학』 제7호, 1993, 209-210면 참조.

27) 錢理群, 「我們這一代人的世界想像」, 『臺灣社會研究季刊』 제57기, 2005, 260-268면 참조.

재했다 사라진 제3세계 인식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6,70년대라는 문화공간이 동아시아적 시야에서 분단체제의 심층 원인을 찾고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중대한 연구대상으로 떠오른다. 정홍성이 1960년대를 1970년대 향토문학론의 기초를 쌓은 “문예부흥기”로서 주목했다면(정, 130-132), 뒤 정후이(呂正惠)는 대만사회의 “각종의 복잡한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혼돈미분의 상태”로 잠복하여 일시적이거나 사회 각 주체의 통일전선을 가능케 한 “우연한 현상”으로 1970년대를 설명했는데(뒤, 210-212), 양자의 관점이 다르긴 하지만 60년대의 모더니즘적 자양과 70년대에 눈뜬 제3세계적 민족의식이 상호 어우러져 꽃피운 ‘향토문학론’의 역사적 의미와 한계를 되짚는 작업은 분명 중요해 보인다. 특히 ‘향토문학론’의 지위가 곧바로 본토문학론에 찬탈당한 역사로부터, 대만민족주의의 잠재적 연원을 찾아내는 것도 가능할 듯하다. 아울러, 오랜 공백으로 비어있는 중국 60년대의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도 연구가 시급하다. 195,60년대 대륙지식인의 세계상상에 대한 치엔 리첸(錢理群)의 글은 오늘날 중국의 고질적 병폐인 중국 중심주의와 중-서 이원론의 문제를 푸는 열쇠를 60년대라는 문화공간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는 암시를 준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민족문학론’ 발생을 전후한 6,70년대의 문화공간을, 중국과 대만의 그것과 횡적 연계선 위에 두고 새로 주목하는 것도 의미 있는 공부거리이다. ‘민족문학론’과 대만의 ‘향토문학론’ 그리고 중국의 제3세계론을 함께 펼쳐놓았을 때, 한국 ‘민족문학론’이 동아시아에서 갖는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보다 온전히 인식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유사한 역사적 맥락에서 태어났음에도 매우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 한반도와 양안의 분단체제를 상호 연관 속에서 파악하게 함으로써, ‘분단체제론’의 중간항으로서의 동아시아의 축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타이완의 시각

윤상우 / 강원대 사회학

- I. 문제제기
- II.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추세
- III. 대만의 국제화전략과 대외경제정책
- IV.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대만의 딜레마
 - 1. 동아시아 경제통합으로부터의 고립
 - 2. 중국과의 '경제협력기본협정'
(兩岸經濟合作架構協定, ECFA)
- V. 맺음말

I. 문제제기

1990년대 이후 세계화(globalization) 경향성과 지역화(regionalization)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이나 북미 등 여타 지역에 비해 지역주의의 제도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져있던 동아시아 지역도 최근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Pempel, 2005; Calder and Fukuyama eds., 2008). 특히 1997년 이후의 아시아통화기금(AMF) 제안, ASEAN+3, 치앙마이 협의(Chiang-Mai Initiative), 다양한 역내 FTA 움직임 등은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교류가 역내무역과 역내투자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제조업과 IT산업에 기반한 정교한 국제분업구조가 형성·발전되어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자 자연스런 귀결로 볼 수 있다(윤상우, 2007). 물론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다양한 구상과 제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이해관계

가 복잡·다기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향후 언제쯤 가시화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실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동아시아 국제분업구조의 중요한 일원이고 역내 무역과 투자를 선도하는 핵심적 주체 중 하나인 대만은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지역경제통합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대만은 1991년 이래 APEC 회원국일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2002년 1월 WTO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지역무역협정(RTA)과 같은 경제통합에 참여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아무런 제도적·법률적 장애물도 가지고 있지 않다(Liao, 2009). 그럼에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국제정치적·외교적 고립, 양안(兩岸) 경제관계 및 대외경제정책에 내재된 정치적 긴장요인 때문에 동아시아의 지역경제통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봉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만 내에서는 점점 더 확대·강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서 대만이 배제되고 주변화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대만정부는 그것이 가져올 경제적·정치적·외교적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그 돌파구를 찾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 하여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대만의 접근방법과 정책대응을 살펴보고, 대만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제약요인과 지역경제통합에의 참여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 시기 지역주의의 추세 속에서 대만의 경험은 분명 독특하고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세계화의 파고에 맞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확보하려는 국가들의 다양한 이합집산이 지역주의를 추동하는 주된 힘이라면, 대만의 지역경제통합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추구하고 현실 정치적 고립의 탈피라는 이중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 및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은 대만의 사례에 보다 주목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음의 2절에서는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최근의 상황과 발전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1990년대 이후 대만정부가 전개한 국제화정책과 대외경제정책의 내용과 변천과정, 그 특성들을 논의하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대만의 정치경제적 딜레마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4절에서는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만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제약요인을 중국의 정치적 영

향력으로 인한 배제와 고립, 그리고 최근 대만의 마잉주(馬英九) 정부가 추진하는 ‘兩岸經濟合作架構協定(ECFA)’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5절에서는 향후 전망과 대만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한다.

II.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추세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연계는 상호연관 되어 있지만 분석적으로는 구분되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주의(regionalism)와 지역화(regionalization)가 그것이다(Gamble and Payne, 1996; Breslin, 2000). 통상적으로 지역주의는 정부정책 주도하의 하향식 활동을 통해 출현하는데, 국가 간 공식적인 협정이나 조약을 통한 지역경제협력·경제통합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한다. 지역주의는 정부 또는 대의체가 주요 참여자인 반(半)하향적 구조를 지니며 경제정책의 협조나 조정에 관한 제도창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비해 지역화는 사회추동적 과정을 통해 상향식으로 발전한다. 지역화의 가장 중요한 추동력은 시장, 민간무역, 투자흐름, 그리고 기업의 정책과 의사결정으로부터 나오는데(Pempel, 2005: 19-20), 이를 통한 경제교류의 지역적 집중현상과 역내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대가 곧 지역화를 의미한다.

1990년 중반까지 동아시아의 긴밀한 통합을 향한 주요 추진력은 ASEAN, ARF, APEC과 같은 명시적이고 공식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문제 해결적 지역화와 연관된 상향식 과정이었다. 길핀(Gilpin)의 평가대로, “지역경제의 조직과 작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아시아의 공식적 제도는 거의 없었다. 경제적 연계는 일차적으로 민간기업의 행위에서 추동되었다”(Gilpin, 2000: 266). 그러나 초기의 시장추동적 통합과는 달리 최근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정부정책에 의해 추동되고 있으며, 많은 수의 FTA와 RTA가 정치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은 초기의 지역화에서 점차적으로 지역주의로 전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장추동적 통합과 정책추동적 통합 사이의 분수령은 1997년 발발한 동아시아 금융위기였다(Chen and Ku, 2007: 172).¹⁾

1)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통화문제를 공동으로 다루어야 할 기능적 수요를 창출했을 뿐 아니라 IMF나 미국과 같은 국제금융부문의 실세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국력을 합쳐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었다. 또한 동일한 위기를 겪으면서 미약하나하나의 지역으로서의 정체성도 형성되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최영중, 2003: 124).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지역경제관계 및 지역주의에서는 두가지 중요한 발전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나는 ASEAN plus Three(ASEAN+3) 프레임웍(framework)의 수립이다. 이는 ASEAN 회원국 10개국과 한·중·일을 포함하는데, ASEAN+3는 최초의 공식적이고, 국가정상차원의, 동아시아만의 배타적 지역경제그룹의 출현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2000년대 이후 동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을 들 수 있다. 특히 ASEAN-중국 FTA가 많은 주목을 받았고, 현재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FTA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Dent, 2005: 358).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경향성의 발전은 현 시기 세계화 및 지역주의의 추세와 대체로 일치한다. 카이(Cai, 2005: 585)는 기존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세계무역기구(WTO)로 집약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FTA로 대표되는 양자간(bilateral) 무역협정 및 지역무역협정의 공존을 지적한 바 있는데, 동아시아 지역주의에서도 이런 다자주의(ASEAN+3)와 양자주의(FTA)의 동시적 발전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ASEAN+3는 1997년 12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SEAN-한중일 정상회의 비공식회담이 계기가 되었는데, 이후 매년 정례화 되면서 지역주의의 제도적 틀로 발전해가기 시작한다. 1999년 제3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경제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였고, 2005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차잉마이 협의(Chiang-Mai Initiative)를 이끌어냄으로써 역내 경제협력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 차잉마이 협의는 역내국가 중 어느 한쪽이 자금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자금흐름상의 충격에 직면할 때 다른 쪽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일종의 통화협력방안이라 할 수 있다(윤상우, 2007: 128). 이어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2001년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와 2002년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지역경제통합의 청사진과 행동계획을 마련하였고, 2005년에는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전격 개최되었다(배궁찬, 2008: 51-52). 여기서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²⁾

이상의 ASEAN+3의 틀과 더불어, 2000년 이후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다

2) ASEAN+3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으로는 Beeson(2003); 진홍상·박승록(2005); 배궁찬(2008); 권율(2008)을 참조하라.

양한 FTA, RTA 프로젝트가 경쟁적으로 추진되어 말 그대로 러쉬를 이룸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새로운 대세적 흐름이 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FTA 추진현황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1>이다.³⁾ 이를 보면, 주로 ASEAN을 중심으로 시작된 FTA 물결이 점차 아시아-태평양 전역을 대상으로 확장되고, 유럽, 중동과 같은 역외국가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자간 FTA 프로젝트의 확산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중요한 함의를 지닐 것으로 전망된다(Dent, 2005: 393-394). 첫째, 그것은 점점 많은 수의 역내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국제경제협정을 도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지역경제구조를 정책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 모두에서 재구성하고 강화한다. 둘째, 새로운 FTA 트렌드는 지역 내 무역 및 투자의 장벽을 낮춤으로써 향후 지역화(regionalization) 과정을 촉진하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공동시장 등)를 구축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창출할 것이다. 셋째, 양자간 FTA 프로젝트의 확산과 경제외교 강화추세의 상호작용은 향후 동아시아 지역질서에서 권력과 영향력 배분의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표 1>의 FTA 현황을 보면,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유독 대만의 위상이 취약한 점이 두드러진다. 대만도 이미 몇몇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또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도 다수이지만, 동아시아 역내국가는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대만과의 FTA를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국가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현재 추세에서 대만의 고립과 배제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 동아시아 주요국가들의 FTA 현황(2007년 6월 기준)

국가/국가군	체결/이행중	협상중	연구중 (향후계획)
ASEAN	AFTA, 중국, 한국	호주-뉴질랜드, 인도, 일본	EU, 미국
중국	ASEAN, 칠레, 홍콩, 마카오, 파키스탄	태국, 호주, GCC(걸프협력회의), 아이슬랜드, 뉴질랜드, 싱가포르 SACU(남아프리카 관세동맹),	인도, 한국-일본, 한국, 페루, 남아프리카
홍콩	중국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AFTA	일본, 파키스탄	EFTA, 인도, 미국

3) 여기에는 FTA 뿐 아니라 FTA의 하위형태라 할 수 있는 CEP(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와 여타의 PTA(Preferential Trading Agreement, 우대 무역협정)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호주, ASEAN, 부르나이, 칠레, GCC, 인도네시아, 한국, 베트남	캐나다, 인도, 남아프리카, 스위스
한국	ASEAN, 칠레, EFTA,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인도, 일본	호주, 중국, EU, 인도, 중국-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MERCOSUR(남미공동시장), 남아프리카, 태국
말레이시아	AFTA, 일본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미국	칠레, 인도, 한국
싱가포르	AFTA, 호주, EFTA, 인도, 일본, 요르단, 한국, 뉴질랜드, 미국, 부르나이-칠레-뉴질랜드	바레인, 캐나다, 중국, 이집트, 쿠웨이트, 멕시코, 파나마, 페루, 카타르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랍에미리트연합
대만	과테말라, 니카라과아,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태국	AFTA, 호주, 중국, 인도, 뉴질랜드, BIMSTEC	바레인, EFTA, 인도, 페루, 미국	MERCOSUR

출처: Ravenhill(2008: 94-95).

이런 점에서 대만은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흐름과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대만의 민간연구소인 대만경제연구원(臺灣經濟研究院)에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현재 상황과 여기에 내재된 역학관계, 향후 전망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제시한 바 있다(Hong and Chiang, 2008: 1-2). 이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핵심 경향성을 객관적이고 적절하게 포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ASEAN+1 통합과 관련하여, ASEAN-중국(2002년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ASEAN-한국(2006년 기본협정), ASEAN-일본(2008년) 협정이 모두 완료·체결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기본협정은 상품교역에만 국한되며, 일본과 ASEAN의 무역협정은 상품, 서비스, 투자를 포괄하는 경제파트너십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다.

둘째, ASEAN+3는 금융안정성(2000년 치앙마이 협의) 및 에너지안보를 포함하는 기능적 협력의 영역에서 결실을 거두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주로 호주와 인도에 더 관심을 가지며, 한국은 미국과 EU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한편, 중국은 지역주의 보다는 에너지 확보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⁴⁾

4) 중국과 관련해서는 다른 견해들도 존재한다. Kuik(2008)은 1990년대를 전후하여 동아시아 지역경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과거의 수동적 참여자에서 주창적 참여자로 바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Cai(2005)는 중국의 경제통합 전략이 대중화경제권 FTA, 동북아 FTA, 중

따라서 ASEAN+3(ASEAN-한중일) FTA가 실현될 가능성은 다소 불확실하다.

셋째, 2005년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는 ASEAN+3 회원국을 중심으로 하면서 인도, 뉴질랜드, 호주가 추가되어 구성된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해보면, 중국은 기존의 ASEAN+3 회원국에 기반 하여 동아시아 FTA(EAFTA)를 수립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반면에, 일본은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면서 동아시아 FTA를 16개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로 확장하고자 한다. 일본의 제안은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다.

넷째, 동북아에서 중국은 일본 및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데 적극적이다. 한국은 이에 반응하고 있지만, 일본은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 일본의 게이단련(經團連)과 같은 민간부문 기업협회는 중국과의 FTA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섯째,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국가인 미국과 한국의 FTA가 미국의회에서 승인된다면 동아시아 지역 전반에 전폭적인 도미노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여섯째, 미국은 점차 확대·강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주의 움직임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손상되고 미국이 주변화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지역의 유일한 범아시아-태평양 조직체인 APEC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III. 대만의 국제화전략과 대외경제정책

사실 대만은 1990년대 이후부터 다양한 국제화전략과 적극적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해왔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대만경제의 전환기적 징후(대만달러의 평가절상, 임금·지가상승, 투자율 하락)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산업구조조정과 산업고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경제적 필요에 의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양안관계에서 파생되는 정치적·경제적 취약성에 대처하고 국제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 여기서는 대만의 다양한 대외경제정책 중에서 동아시아

화권-동남아 FTA, 동아시아 FTA 등 다층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지역통합과 관련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1993년부터 본격화된 ‘남향정책(南向政策)’, 1995년 발표된 ‘아태운영중심(亞太運營中心, the Asia-Pacific Regional Operation Center: APROC)’, 그리고 대만이 WTO에 가입한 2002년 이후의 FTA정책이 그것이다.

리덩후이(李登輝)의 국민당정부에 의해 시작된 남향정책은 그동안 다소간의 부침과 변화가 있었지만 천수이벤(陳水扁) 정부 및 최근의 마잉주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전략적인 대외경제정책이다. 이는 동남아 국가로의 무역 및 투자를 증대함으로써 대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다변화하고 ASEAN과의 경제관계 및 준 공식적 관계를 강화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남향정책은 1993년 ‘대동남아경제무역사업강화강령(對東南亞經濟貿易工作強化綱領)’을 제정함으로써 공식화되었는데, 이것의 계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대만기업들의 대중국투자가 대만정부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확대된 것에서 기인한다(윤상우, 2005: 240). 따라서 남향정책은 대만기업들의 대중국투자 편향에 따른 정치경제적 위험성을 분산시키고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것이다.

이러한 정책수단은 초기에는 정치적으로 성공적이었다. 한 예로, 1994년 초반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을 순방한 리덩후이의 외교투어는 남향정책의 유익한 성과였다. 그러나 경제적 결과는 보다 복잡하다. 비록 대만의 ASEAN과의 무역은 지역금융위기가 발발한 1998년을 제외하곤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만의 대동남아 투자는 대중국투자와 비교할 때 점차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Wu, 2008: 115).

천수이벤 정부는 2003년 ASEAN 국가들이 ASEAN을 경제공동체(AEC)로 전환하는데 합의한 시점을 전후해 2단계 남향정책을 공식 도입하였다. 2단계 남향정책의 목표는 1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대만정부는 점차 ASEAN 전체 또는 ASEAN 개별국가와의 FTA를 촉진하는데 더욱 강조점을 두게 된다. 구체적으로 대만 경제부가 밝힌 ‘새로운 남향정책’의 목표는, ①대만기업들이 ‘西進’(중국)에만 초점을 맞추므로써 야기되는 위험을 분산시키고 자원을 지구적으로 배분하며, 국제분업에 더욱 부합하는 국제환경을 창출하는데 기여, ②동남아시아 경제권과 통합을 가속화하고 이들과의 실질적인 경제무역관계를 증진·유지하며, 여기서 주변화 되는 것을 방지함, ③특정한 목표국가에 대한 무역·투자를 위한 효과적인 패키지를 도입하고 ASEAN 국가들과 쌍방의 원인을 도모하는 FTA체결을 촉진하는데 맞추어져 있다(Bureau of Foreign Trade, 2003). 이후 천수이벤의 집권2기에서는 ASEAN에 더하여 인도를 추가

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2008년 출범한 마잉주의 국민당정부도 미국, EU, 일본과의 연계와 더불어 ASEAN과의 관계에 정책의 최우선권을 두고 있다. 최근에 마잉주 정부는 ASEAN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공표하고, ASEAN 회원국과의 의회교류 및 싱크탱크 대화기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3단계 남향정책으로 규정될 수 있다(Wu, 2008: 121-122). 3단계 남향정책의 목표 역시 이전의 1, 2단계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마잉주 정부는 중국-대만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ASEAN과 대만간의 다자간 또는 쌍무적 FTA를 체결하는데 중국의 저항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는 차이를 보인다.

장기간에 걸친 대만의 남향정책이 대만기업들의 무역·투자를 다변화하고 대만경제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긍정적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동아시아 지역통합에서의 대만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남아로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동남아국가에 대한 별다른 영향력과 발언권을 갖지 못한 채, ASEAN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통합과정에서 거의 완전하게 배제되고 있다. 대만은 지속적인 청원과 접촉을 통해 ASEAN과의 FTA에 참여하고자 희망하고 있지만 ASEAN은 뚜렷한 이유 없이 대화기구에 대만을 초청하는 것을 거부했다(Chen and Ku, 2007: 182-183). 또한 그 과정에서 대만은 대만을 위해 로비해줄 지역 이익집단을 창출하는데 실패했다. 대만기업의 동남아투자 대부분이 수출지향적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서 대만의 이해관계와 긴밀히 결합된 유일한 집단은 대만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준 현지 노동자뿐이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대만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제화전략은 1995년 발표한 ‘아태운영센터(APROC)’ 계획이다. 이 계획은 대만을 동아시아 지역의 제조·물류·금융·통신의 허브기지로 만들어 세계 각국의 다국적기업들에게 동남아시아, 중국, 기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시장개척을 위한 이상적인 경영환경을 제공하고, 아태지역의 통합과정에서 대만의 역할을 높이는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최수웅, 1998: 67). 이는 1997년 홍콩의 중국반환을 계기로 홍콩의 국제금융 및 무역기능을 대만이 흡수하고, 고임금과 노동력부족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외자유치를 통한 산업고도화로 보완해가면서,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 및 WTO 가입여건

을 조성하여 중국의 대만고립화 정책에 대응해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 경제부는 1997년 48개 다국적기업과 전략적 제휴의 향서를 체결하고 23개 다국적기업의 운영센터를 유치했으며 23건의 투자제안과 39건의 기술이전·합작개발 안건이 타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지만(최수웅, 1998: 73), 이 지역 최대경제권인 중국과의 직교역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계획은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고, 오히려 대만정부는 APROC로 인하여 대만기업들의 대중국진출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했다(Leng, 1998; 윤상우, 2005: 246-247). 이후 APROC 계획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통합에서 대만의 고립이 가속화되면서 외자기업들의 대만투자가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다국적기업들은 대만에 설립한 구매센터나 아태지역 영업본부를 오히려 중국이나 홍콩으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양평섭·여지나·박현정·배승빈, 2007: 45-46).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관련된 대만의 대외경제정책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2002년 WTO 가입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FTA추진정책이다. 사실 대만정부는 WTO에 공식가입하기 이전부터 양자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왔고 이를 위해 정부부처 내에 FTA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도 했다.⁵⁾ 대만의 FTA 추진정책은 ASEAN+3, ASEAN+1 등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만에게 있어 FTA 자체가 지니는 전략적, 외교적, 경제적 중요성이 워낙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Cai, 2005: 594-595).

첫째, FTA는 대만이 추구하는 전략적, 외교적 정책들 중에서 단연 첫 번째의 정책우선권이 두어진다. WTO 회원국 지위와 마찬가지로 FTA는 대만이 중국의 외교적 고립정책을 돌파하는데 있어 또 다른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대만에게 자신의 주권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공고히 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부 대만학자들은 모든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특히 미국과의 FTA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둘째, 다른 국가와의 FTA는 대만이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을 줄이고, 중국의 점증하는 경제적 영향력을 상쇄하는데 도움을 준다. 1980년대 이후 대만기업들의 대중국투자과 무역이 급증하면서, 중국은 사실상 대만경제의

5) 전 총통이었던 리덩후이는 2001년 6월 고위급 정치인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및 일본과의 FTA를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천수이볜 총통 역시 2002년 5월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 미국, 일본, 싱가포르와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FTA를 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생존을 좌우할만한 비중으로까지 성장하였다. 단적으로 중국은 대만의 최대 수출시장이며, 동시에 최대 무역흑자를 제공해주는 원천이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의 심화는 대만경제의 공동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만의 정치적 지위와 협상력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불안감을 낳고 있다(윤상우, 2005). 여기서 다른 국가와의 FTA는 이러한 경향성을 상쇄·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FTA는 앞서 언급한 전략적, 외교적 이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도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학자들은 미국 및 일본과의 FTA가 대만경제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지역경제 및 국제분업구조에서 대만의 중개자역할 및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는 대만을 동아시아지역의 제조·물류·금융·통신의 허브기지로 육성한다는 ‘아태운영중심’ 계획을 실현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대만은 WTO 가입(2002년 1월) 전후로 매우 신속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미 2001년 11월에 대만정부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일본, 미국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만의 FTA 협상국 후보로 공표하였고, 같은 달 일본과의 비공식 장관급회담을 통해 양자간 FTA의 타당성에 대한 민간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2002년 11월)에 미국-대만 FTA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내 지지(미의회 및 헤리티지재단과 같은 싱크탱크)를 이끌어냈고, 상하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는 싱가포르와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여 양자간 FTA 가능성을 논의한 바 있다(Dent, 2005: 396-397). 그리고 2002년 4월 싱가포르에 양자간 FTA를 공식제의하고, 뉴질랜드와는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대만의 적극적인 FTA 시도는 중국의 개입으로 곧 좌절되게 된다.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2002년 중국의 경고가 나온 직후 대만이 추진 중이던 모든 FTA 협상과 논의는 위축되었고 이후 사실상 중단되게 된다. 결국, 대만은 애초에 계획했던 협상상대국 및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FTA에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자신과 수교관계를 맺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FTA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대만은 2003년 8월 최초로 파나마와 FTA를 체결하였고 이후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와 협정을 체결하여 현재 발효 중에 있다. 문제는 대만 총수출액의 88.7%가 아시아, 유럽, 북미에 집중돼있는데 비해 대만이 FTA를 체결한 이들 5개 국가의 수출비중은 대만 전체의 0.187%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臺灣 經濟部, 2009: 2) 나아가 대만이 완전한 외교관계를 누리는 26개 소국을 모두 합쳐도 대만 전

체무역액의 4%에 불과하다. 따라서 긴밀한 무역·투자관계, 국제분업구조상의 연계를 지니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만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모두에서 대만의 FTA 옵션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의 <표 2>는 대만의 FTA 추진상황을 정리해 보여준다.

<표 2> 대만의 FTA 추진상황

FTA 기체결	FTA 협상중	향후 FTA 계획
대만-파나마 (2004. 1.1) 대만-과테말라 (2006. 7.1) 대만-니카라과 (2007. 1.1) 대만-엘살바도르 (2007. 5.) 대만-온두라스 (2007. 5.)	대만-도미니카 공화국 (1라운드협상 2006. 10.종료) 대만-파라과이 대만-코스타리카	미국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필리핀

출처: 行政院 經濟部國際貿易局(<http://eweb.trade.gov.tw>).

IV.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대만의 딜레마

1. 동아시아 경제통합으로부터의 고립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점증하는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지역주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대만이 추진했던 다양한 전략적 시도들과 대외정책들은 사실상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국제공동체에서 대만의 불확실한 지위와 관련 있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상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개입과 대만고립 정책이 놓여있다. 주지하듯이,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전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원칙을 수용하여 대만이 중국영토의 일부이며 주권국가가 아니라는 관점을 받아들인데, 이는 대만의 대외정책에 최대 장애물로 작용한다. 나아가 중국은 여타의 지역 행위자와 국제행위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이익제기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민국가성(nation-statehood)이 회원자격의 필수요건인 어떠한 국제조직에 대만이 가입하려는 시도도 무자비하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Li, 2006).⁶⁾

6) 대만은 아직까지 UN 회원국이 아니며 대만이 가입한 국제기구 및 정부간기구도 2002년 3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UN의 신생회원국인 마이크로네시아(65개), 투발루(65개)같은 소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Li, 2006: 599).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배타적인 정책기조가 동아시아 지역통합이나 FTA 같은 순수한 경제적 사안에도 지속적으로 관철되고 있다는 점이다. WTO 가입⁷⁾을 전후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만의 FTA 움직임을 목격한 이후, 중국은 의심의 여지없이 대만의 FTA 옵션을 제한하려고 시도했다. 2002년 6월 중국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 스푹광성(石廣生)은 중국정부는 대만과 FTA를 체결하려는 어떠한 외교상대국들도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행위는 중국과의 무역 및 경제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당사국은 심각한 정치적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Dent, 2005: 397). 결국 중국 측의 이러한 경고는 당시, 대만이 추진하던 모든 FTA 협상을 좌절시키는 계기가 된다.

단적인 예로 대만-싱가포르 FTA 프로젝트는 싱가포르가 대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새로운 전제조건, 즉 FTA 협상이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중단되었다(Taiwan Economic News, 2003/06/30). 또한 일본 및 뉴질랜드와의 FTA 프로젝트도 중국의 경고 이후로 위축되면서 점차 흐지부지되었다. 이후 대만은 필리핀이나 ASEAN 전체와의 새로운 FTA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어느 쪽으로부터도 관심을 얻지 못했다. 급기야는 향후 FTA 협상에서 대만명칭과 관련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공표(예컨대 APEC에서 사용한 Chinese Taipei)했지만 대만의 주요 무역상대국들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Taipei Times, 2003/10/17). 대만은 미국, 일본, 한국 등 교역규모가 큰 비수교 국가들과의 FTA 협상을 원하고 있으나, 이들 비수교국들의 경우 대만 이외의 다른 국가들과의 FTA 추진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대만과의 FTA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실질적인 논의는 진전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⁸⁾

동아시아 지역주의에서 대만의 고립과 배제는 새로운 FTA 트렌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또 다른 지역주의 추세인 ASEAN+3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2003년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동아시아 경제장

7) 대만의 WTO 가입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APEC 회의에서 대만이 국가의 명칭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관세지역의 명칭으로 WTO에 가입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결국 대만은 “타이완, 펑후, 진먼, 마주 독립관세지역(Separate Custom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이란 이름으로 가입하게 된다.

8) 미국의 경우는 중국의 경고와 무관하게 대만과 FTA를 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대만과의 FTA 협상은 오히려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다지 잘 진척되고 있지 못하다. 미국은 대만과의 FTA가 그다지 큰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과 농업부문개방, 미국 제약산업 개방 등 경제현안에서의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Taiwan Economic News, 2004/08/17).

관회의에서 당시 타이페이 시장이었던 마잉주(현 총통)는 기존의 ASEAN+3를 대만을 포함한 ASEAN+4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지만(Cai, 2003: 591),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존의 양안관계의 현실 속에서 대만이 동아시아 지역경제조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APEC이나 WTO 가입의 경우처럼 중국과의 정치적 협상 및 조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만은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 참여하는데 있어 관련 국가들과 경제적 실리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와 더불어, 중국의 거센 외교정책 및 대만고립정책을 정치적으로 돌파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만의 FTA 및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참여하려는 시도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대만이 고립되고 주변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대만경제에 실질적 위협이자 부정적인 효과를 강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차이룽과 장지첸은 동아시아의 FTA 물결과 대만의 고립이 대만의 경제·무역측면, 지정학적 측면, 양안관계 등에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한다(Hong and Chiang, 2008: 2).

첫째, 경제·무역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FTA는 대만에 FTA관세차별화 효과에 따른 무역전환(trade diversion)⁹⁾, 투자전환, 교역조건의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며, 이외에도 FTA 투자가이드라인(투자이슈, 서비스교역, IPR, 경쟁정책)과 FTA 원산지규정도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대만의 특정산업부문은 무역상의 타격을 받을 것이며 대만의 외국자본 유치능력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둘째, 지정학적 측면과 관련하여 ASEAN+중국, 그리고 수많은 FTA의 수립은 일정부분 대만의 생존공간을 제한하는 공시효과(announcement effect)를 지닌다. 이에 따라 지역주의의 흐름 속에서 대만과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접촉 가능성은 차단될 것이며, 경제무역정책을 포함한 대만의 정책적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다.

셋째, 양안 경제무역관계의 측면이다. 현재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에서 대만기업들은 대중투자와 무역(부품·소재, 생산설비)을 선도함으로써 사실상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대만을 배제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된다면 기존의 양안 경제관계도 변화할 것이고 다른 형태로 재규정될 것이다.

9) 무역전환은 FTA나 관세동맹에 따른 영향으로 수출입이 역외국가에서 역내국가로 전환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ASEAN+중국, ASEAN+3, 여타 FTA의 효과가 당장 현실화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연구들은 이미 대만경제의 낙관적이지 않은 미래를 예상하고 있다. 대만 중화경제연구원(CIER)의 조사에 따르면 ASEAN+중국의 영향은 가까운 장래에 대만의 실질GDP를 0.151% 하락시키고 교역조건을 0.256% 악화시키며, 7억8,400만 달러 규모의 사회적 후생과 12억4,000만달러의 총생산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Wu, 2008: 113). 그리고 천텐지와 쿠잉화의 분석에 따르면, ASEAN+중국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될 경우 대만의 수출액은 ASEAN 4억7,800만 달러, 중국은 4,700만 달러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ASEAN+3(한중일)이 실현되면 대만의 수출액은 일본 9억3,300만 달러, 한국 1억8,300만 달러, ASEAN 1억100만 달러, 중국 8,200만 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Chen and Ku, 2007: 177-179).

특히 대만은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향해 매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한국, 싱가포르 등 경쟁 국가들과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뒤쳐지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는 상징적으로 대만경제에 큰 심리적 부담을 주었는데, 대만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經濟建設委員會, CEPD)는 한미 FTA로 인한 직접적인 대미 수출손실이 연간 20억달러에 달하고 대만의 섬유·의류, 신발, 플라스틱 산업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Taiwan Economic News, 2007/07/02).

또한 2007년 한국-ASEAN FTA 체결 직후 한국의 ASEAN 회원국 수출이 괄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대만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의 황치펑 국장은 많은 국가들, 특히 동아시아 인접국들이 FTA를 체결한 직후 세계시장에서 대만의 위치가 점점 주변화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대만의 세계수출점유율은 1999년 2.2%에서 2008년 1.6%로 큰 폭 하락한 반면, 한국과 싱가포르의 수출점유율(한국 2.6%→2.6%, 싱가포르 2.0%→2.1%)은 과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iwan Economic News, 2009/08/07).

2. 중국과의 ‘경제협력기본협정’(兩岸經濟合作架構協定, ECFA)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5월 출범한 마잉주 국민당정부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대만경제의 회복을 주요 국정목표로 표방하고 있다.¹⁰⁾ 이를 위해 마잉주정부는 ①대중국 경제교류 확대(전면적인 三通 실현, 관광시장 개방, 대

10) 마잉주 후보가 총통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대만 독립·통일 논의보다는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주력하여 중국경제의 변영·발전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적극적인 양안관계에 대한 공약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중투자 한도 및 범위 확대), ②대만·중국간 ‘경제협력협상회의’ 전개, ③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국가 대만’의 지리적·산업적 우위 회복을 주요 대중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박현정, 2008). 특히, 마 총통은 취임이전부터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진전될 경우 중국-대만 FTA 체결을 통해 ‘중국-대만공동시장’을 창설하겠다고 발언하고, 대만이 중국-홍콩 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와 유사한 형태의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한국은행, 2008: 6). 이러한 마잉주 정부의 적극적 의지는 2009년 들어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으로 구체화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다.

2009년 4월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會) 천윈린(陳雲林)회장과 대만 해협교류기금회(海基會) 장빙쿤(江丙坤)이사장 간의 제3차 양안회담에서 정부고위급으로는 처음으로 ECFA의 체결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고, 2009년 5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우보슝(吳伯雄) 대만 국민당 주석 간의 국공회담에서도 ECF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하반기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하면서 ‘중국판 FTA’라 할 수 있는 ECFA는 양안정부 차원에서 공식화된다(서울경제신문, 2009/06/11). ECFA는 상호 관세인하와 관세장벽의 폐지, 자금·노무·상품의 자유무역화, 투자개방, 이중과세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FTA나 CEPA처럼 양안간 무역장벽을 최소화하고 투자화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사실상의 FTA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ECFA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이 붙은 것은 FTA는 주권국가간 협정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고, CEPA는 중국-홍콩 간 CEPA에서 연상되듯이 ‘일국양제’ 원칙을 수용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대만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정과 관련이 있다(Liao, 2009).¹¹⁾

대만정부는 ECFA의 목표로 ①양안 경제관계의 정상화, ②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대만의 주변화 회피, ③대만 경제무역의 세계화 촉진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대만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키고 이후 ECFA의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臺灣經濟部, 2009: 7-8). 그동안 대만의 FTA 시도 및 지역경제통합에의 참여노력을 번번히 좌절시켜왔던 중국은 ECFA와 관련

11) 중국-대만간의 공식적 경제통합은 사실상 중국이 먼저 제안했던 사안이다. 2003년 7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주임인 왕자이시는 처음으로 중국-홍콩과 같은 CEPA를 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제안은 상무부와 대만사무관공실을 통해 이후에도 계속되는데 대만의 천수이볜 정부는 이것이 ‘일국양제’의 산물이라 생각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다(Liao, 2009: 4).

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만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2003년 홍콩, 마카오와의 CEPA에 이어 대만과의 ECFA가 성사되면 중국이 애초부터 의도했던 ‘대중화경제권 FTA’(Cai, 2005)가 실현되고 막대한 경제적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향후 일국양제에 입각한 통일방안에 보다 유리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ECFA 추진 이후에 양안관계는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단적으로, 그동안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절대 반대해왔던 중국정부가 2009년 5월 대만의 세계보건총회(WHA)에 옵저버 자격을 이례적으로 허용해 대만대표가 참석할 수 있게 한 것이나, 2009년 5월 대규모 구매사절단을 대만에 파견하여 22억 달러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주간조선, 2009/07/20). 현재 ECFA 협상은 계속 급진전되어 10월말에 해협회-해기회의 ECFA 공식 실무협회가 개최되며, 2010년 초반에 협정이 공식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 경제부 스옌상(施顏祥) 부장은 “대만의 ECFA 관련 작업은 이미 완성단계이며 양안 간의 ECFA 체결은 늦어도 내년 봄 이전까지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문화일보, 2009/09/30).

그러나 중국-대만 정부차원에서의 신속한 협상진전과는 달리 대만사회 내에서는 아직도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대만의 민간기업부문은 ECFA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대만공상총회 등 6개 경제단체들은 중-대만 간 ECFA 추진합의 직후, 성명을 통해 “세계의 지역공동체 결성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은 정치외교적 고립으로 지역공동체 참여가 제한된 상태이다. 따라서 현 상황이 지속되면 대만은 수출경쟁력을 상실하고 외자도 유출될 것이므로 중국과의 경제협력협정을 통해 현 난국을 돌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경제신문, 2009/06/11). 반면에 대만의 야당인 민진당(民進黨)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진당은 ECFA가 체결될 경우, 대만의 주권이 흔들릴 뿐 아니라 농업 및 공업분야 시장이 중국에 개방돼 대만의 관련산업이 타격을 입고 실업율도 높아질 것이라 주장하면서,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주석은 ECFA가 대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민투표로 협정 체결여부를 결정하자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연합뉴스, 2009/06/15). 실제 대만의 시민사회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해, 대만의 중국시보(中國時報)가 7월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09/08/05). 이는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거의 비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대만의 지식인집단 내에서는 협정의 형식, 중국의 의도와 관련해 비판적 여론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마잉주 정부가 사실상 ‘하

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는 ECFA 협정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 대만이 동등한 WTO 회원국인 만큼 FTA 형태로 경제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Taipei Times, 2009/08/04). 또한 저명한 대만경제 전문가인 Peter C.Y. Chow(周鉅原)교수는 동아시아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 쌍무적 혹은 다자적 FTA를 체결하는 것 없이 ECFA를 추진한다면 대만은 “바퀴축-바퀴살”(hub-and-spoke) 시나리오의 덫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즉 중국은 허브역할의 바퀴축이 될 것이고 대만은 중국에게만 연결되어 있는 바퀴살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논리로, 전 정책자문위원이었던 황텐린(黃天麟) 역시 ECFA가 대만과 다른 나라들의 FTA 체결을 억제해서 ECFA가 대만의 유일한 희망이 되게 만들려는 중국 측의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의 한미 FTA 과정에서도 그러했듯이, 대만정부가 ECFA에 대한 연구기관(중화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왜곡해 발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즉, 정부가 ECFA의 경제적 효과를 과장하고 그것의 잠재적 위협효과는 제대로 발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Taipei Times, 2009/07/31; Taiwan News, 2009/07/31).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당의 보이는 손(visible hand)이 ECFA 평가결과를 훼손하고 있다”는 격앙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만사회내의 여러 논란과 상당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ECFA는 결국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대만정부와 중국정부가 전례 없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ECFA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협상진행과정이 대단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을 무척 높다고 보여 진다. 또한 마잉주정부가 국정최대과제로 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입법원의 2/3을 국민당이 장악하고 있는 점도 그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의 대만이 ECFA 외에는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에 참여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일 것이다.

V. 맺음말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수출지향적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룩해왔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대체로 그 흐름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다. 실제로 대만은 1990년대 이후 민간기업 및 무역·투자차원에서 진행된 동아시아의 지역화에 적극 참여해왔고 양안경제 관계를 통해 사실상 이를 견인함으로써 오늘날의 경쟁력과 경제적 지위를 갖

출 수 있었다. 그런데 2000년대 전후로 본격화된 정부차원의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대만의 참여의지와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선택지를 제약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대로, 경제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대만이 처한 국제정치적 고립과 양안간의 정치적 긴장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만의 경험은 현 시기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형성·발전·변동과정이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요인에 의해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2008년 마잉주 정부의 출범이후 대만의 지역경제전략은 중국과의 ECFA를 통해 경제적 고립을 타파하고 차후에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FTA 체결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한 전략이 성공할지의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대만의 대외전략과 미래가 불투명한 것처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미래 역시 아직 많은 점에서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권 율. 2008.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과제.”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이매진.
- 박현정. 2008. 「대만의 차기 총통 당선: 중국·대만 경제관계 전망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08-0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배금찬. 2008.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전개과정: ASEAN+3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이매진.
- 양평섭·여지나·박현정·배승빈. 2007.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화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윤상우. 2005. “중국·대만의 경제통합과 대만 성장모델.” 『경제와 사회』 제 66호.
- 윤상우. 2007.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FTA: 가능성과 한계.” 국민호 외. 『동아시아 발전, 동북아 경제통합과 화해협력』. 아르케.
- 진홍상·박승록. 2005. 『한·중·일 경제관계와 동북아 경제협력』. 한국경제연구원.
- 최수웅. 1998. 『대만기업의 국제화전략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영중. 2003.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선택』. 아연출판부.
- 한국은행. 2008. 「대만 신정권의 대중국 관계 개선정책과 향후 전망」. 해외경제정보 제2008-43호.
- 臺灣 經濟部. 2009. 「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ECFA)構想及推動重點」. 民國 98年 4月 13日.
- Breslin, Shaun. 2000. "Decentralization, Globalization, and China's Partial Re-engagement with the Global Economy." *New Political Economy* 5(2): 205-226.
- Bureau of Foreign Trade, ROC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2003. "Introduction to the New Go-South Policy." 13. October 2003.
- Cai, Kevin G. 2005. "The China-ASEAN Free Trade Agreement and Taiwa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4(45): 585-597.
- Calder, Kent E. and Francis Fukuyama (eds.). 2008. *East Asian Multilateralism: Prospect for Regional Stabilit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Chen, Tain-Jy and Ku Ying-hua. 2007. "Taiwan and East Asian

- Integration." in Peter C.Y. Chow (ed.). *Economic Integration, Democratization and National Security in East Asia: Shifting Paradigms in US, China, and Taiwan Relations*. Cheltenham, UK: Edward Elgar.
- Dent, Christopher M. 2005. "Taiwan and the New Regional Political Economy of East Asia." *The China Quarterly* 182: 385-406.
- Gamble, Andrew and Anthony Payne (eds.). 1996. *Regionalism and World Order*. London: Macmillan.
- Gilpin, Robert. 2000. *The Challenge of Global Capitalism: the World Economy in the Twenty-first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ong, Tsai-Lung and Chiang Chi-Chen. 2008. "FTA Proliferation in East Asia and Taiwan's Responsive Measures." *Economic Analysis*. June 2008. Taipei: Taiw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 Kuik, Cheng-Chwee. 2008. "China's Evolving Multilateralism in Asia: The Aussenpolitik and Innenpolitik Explanations." in Kent E. Calder and Francis Fukuyama (eds.). 2008. *East Asian Multilateralism: Prospect for Regional Stabilit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eng, Tse-Kang. 1998. "Dynamics of Taiwan-Mainland China Economic Relations: the Role of Private Firms." *Asian Survey* 38(5): 494-509.
- Li, Chien-Pin. 2006. "Taiwan's Participation i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sian Survey* 46(4): 597-614.
- Liao, Shun-Yu. 2009. "The Feasibility of Cross-Straits Economy and Trade Cooperation under the WTO Framework." *Economic Analysis*. February 2009. Taipei: Taiw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 Pempel, T.J. 2005. "Introduction: Emerging Webs of Regional Connectedness." in T.J. Pempel (ed.). *Remapping East Asia: The Construction of a Reg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Ravenhill, John. 2008. "The New Bilateralism in East Asia." in Kent E. Calder and Francis Fukuyama (eds.). 2008. *East Asian Multilateralism: Prospect for Regional Stabilit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Wu, Linjun. 2008. "Taiwan and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A Context for Economic Statecraft in and Asian Regional Free Trade Area." *Issues & Studies* 44(4): 99-128.

대만 시민사회의 성장과 그 구조적 한계

: 동아시아 시민사회와의 연대는 가능한가?

박윤철 / 호서대 중어중국학과

- I. 들어가는 말
- II. 시민사회 개념의 정치사회성
- III. 국가/시민사회의 관계 변화
- IV. 시민사회의 양적 성장
- V. 시민사회 발전의 구조적 한계
- VI. 동아시아 시민사회와의 연대에 대한 전망
- VII.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신자유주의가 주도하는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국가 간의 무한경쟁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국가 간의 연대나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경제영역에서는 지역 간 경제공동체 혹은 블록화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연대를 위한 실제적 노력 또한 집중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도 최근 경제공동체에 대한 실제적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대만 역시 경제영역에서의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 영역에서 사회적 혹은 문화적 수준의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문제제기나 논의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일부 사회 및 학술단체들이 이러한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회적 의제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 반향은 여전히 그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

본 글은 대만 시민사회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이슈화나 그들의 동아시아적 연대 가능성 대하여 직접적인 논의를 시도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만 시민사회의 역사적 및 구조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통해, 대만 시민사회가 동아시아적 연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보고자 한다. 먼저, 민주화시기 대만 시민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담론의 역할을 했던 ‘민간사회(民間社會)’ 개념과 민주화 이후의 대만 시민사회를 개념화하는 용어인 ‘공민사회(公民社會)’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성격과 그 질적 전환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 민주화 전후의 국가/시민사회 관계 변화와 시민사회의 양적 성장을 관찰하고, 또 그러한 변화와 성장에 가진 구조적 한계를 검토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대만 시민사회의 동아시아적 연대의 가능성을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II. 시민사회 개념의 정치사회성

대만사회에서는 서구사회가 발전시킨 ‘civil society’라는 개념이 한국과는 달리 각기 3가지로 분리되어 사용되고 있다. 서구적 개념의 ‘civil society’는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라고 번역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자신의 국가적 영역에 대응하는 ‘civil society’를 ‘시민사회’가 아닌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개념화하고 있다. 즉 민주화 시기에는 ‘민간사회(民間社會)’로, 또 민주화 이후에는 ‘공민사회(公民社會)’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민간사회’라는 용어는 최초의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로 인하여 국민당의 ‘레닌주의 당국체제(quasi-Leninist party-state system)’¹⁾가 완전히 와해될 때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국민당의 ‘당국체제’가 와해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완성되자, 대만 시민사회를 개념화하고 있던 ‘민간사회’라는 용어는 점차 폐기되고, ‘공민사회’라는 용어가 중용되기 시작하였다. ‘공민사회’는 국가와 대립하기 보다는 공공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대만 ‘시민사회’를 개념화하고 있는 용어의 전환을 잘 관찰하면, 대만 시민사회의 본질적 성격과 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민주화 이전, 국민당정권은 공산당과 거의 유사한 ‘레닌주의 당국체제’를

1) 국민당정권은 자본주의적 발전을 시도하는 국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구소련 및 동구 공산국가들이 채택했던 ‘민주집중제’를 근간으로 레닌주의 ‘당국체제’를 도입하여 당이 국가기구의 우위에 서서 직접 국가와 사회를 통치하였다.

채택하여, 국가와 사회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회영역이 국가화 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사회운동 세력은 사회 내에 국가의 통제에 저항하는 자주적인 시민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서구의 ‘시민사회’ 개념과는 구별되며, 대만사회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민간사회’라는 담론을 창출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적 요소가 배제된 순수한 사회영역임과, 동시에 국가에 저항하는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민당 일당 지배체제가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국가 및 그 관련부문을 한 영역으로 범주화한 다음, 이로부터 배제된 비국가적 부문의 총합을 나머지 한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이 양자의 이원적 대립구조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면, 전자를 동양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관(官)’ 혹은 ‘관방(官方)’으로, 후자를 ‘민(民)’ 혹은 ‘민간(民間)’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당 일당 지배집단과 시민사회 사이의 단순한 이분화가 이루어졌다(何明修, 1998; 南方朔, 1989). 그 결과 대만사회는 국가와 국가화 되어 있는 사회영역을 포함하는 ‘관방(官方)’영역과 순수한 ‘민간(民間)’영역으로 이분화 되었다. ‘민간사회’라는 개념은 특정한 역사적 국면을 잘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당의 당국체제 밖에 존재하는 모든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박윤철, 2003).

다음, ‘민간사회’라는 개념은 대만 내부의 민족적 대립 구도를 형성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당시 인구의 약 13%에 불과한 ‘외성인(外省人)²⁾들이 국가부문과 국가화 된 사회의 각 영역을 장악하고 국가 및 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반면 전인구의 85%를 차지하는 다수의 ‘본성인(本省人)’들은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영역에서 배제된 채 피식민적 위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민간사회’란 구호는 국가부문의 ‘외성인’과 민간부문의 ‘본성인’ 사이의 갈등과 대립의식을 고취하는데 유용한 전략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당시의 반대운동 진영은 ‘대만독립파’와 ‘대만독립반대파’로 분열되어, 시민사회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민간사회’라는 담론 하에서 ‘대만독립 반대’ 혹은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국민당 세력은 ‘관

2) 대만은 크게 4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성인(外省人)’, ‘민난인(閩南人)’, ‘커자인(客家人)’ 및 ‘폴리네시아계통 원주민’ 등이다. ‘외성인’ 약 13%, ‘민난인’ 약 70%, ‘커자인’ 약 16% 및 원주민 약 2% 정도이다. ‘민난인’과 ‘커자인’을 합쳐서 대만성 출신이라는 의미의 ‘본성인(本省人)’ 혹은 ‘대만인’이라 부른다. 그러나 ‘대만인’이 대만 전체 국민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외성인’과 ‘원주민’도 포함된다. 본 글에서는 ‘대만인’을 민족 모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서만 사용한다.

(官)’의 영역에 속하고, 반대진영의 ‘대만독립반대파’는 ‘민(民)’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양자의 이질성을 부각시켜, 반대운동 진영의 단결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넷째, 국민당과 국가기구는 국민경제의 상당부분을 ‘공영(公營)’과 ‘당영(黨營)’ 사업 및 기업³⁾으로 직접 소유하고 있었다. 또 그들은 여러 가지 산업부문의 전략적 고지를 점령하여 민간자본의 자유로운 발전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만의 민간 대기업들은 대부분 내수위주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내수시장 보호정책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간파한 사회운동지도자들은 ‘민간사회’라는 담론을 강조함으로써, 민영화를 통한 자유시장경제를 유도함과 동시에, 민간경제 주도자로서의 자본가계급의 자주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그들과 국민당 및 국가기구와의 종속적인 유착관계를 완화내지 타파시키고자하였다(何方, 1990).

마지막으로, ‘민간’이라는 용어는 한국사회가 반독재 민주화투쟁 시기에 주요한 담론으로 사용했던 ‘민중(民衆)’이라는 개념과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 영역 내의 모든 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비계급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로서, 피지배계급내의 분파적 갈등이나 충돌을 미연에 차단하고(鄧正來, 2001), 또 보수적이고 체제지향적인 성격을 가진 ‘자본가계급’과 구(舊)중산계급까지도 포섭할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대만 경제기적의 실제 주역인 중소기업주, 즉 ‘구(舊)중산계급’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국민당체제에서 소외된 ‘본성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주요한 포섭대상이었다.

1990년대에 진입한 후, ‘본성인’에 의한 대만의 통치를 의미하는 ‘대만화(臺灣化)’를 통해, 국민당 일당 지배체제를 약화시켰으며, 2000년 3월에는 마침내 직접선거를 통해 50여년에 걸친 국민당 ‘당국체제’를 무너뜨리고, 야당인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이 집권하게 되었다. 야당이 집권함에 따라, 사회의 국가화 혹은 국민당화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으며,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원적 대립구조는 점차 완화되었다. 아울러 기존의 대립적 구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사회조직을 출현시켰다.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국가와의 상호작용 및 조화하는 새로운 시민사회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민역할, 공민참여 및 공공적인 담론영역 등을 포함하는 공적인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

3) ‘공영’사업 및 기업은 중앙정부가 경영하는 ‘국영’사업 및 기업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대만성 정부가 경영하는 ‘성영(省營)’사업 및 기업 그리고 ‘현(縣)’, ‘시(市)’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현영(縣營)’ 및 ‘시영(市營)’ 사업 및 기업을 포함한다. 당영 사업 및 기업은 국민당이 자신의 사유재산으로서 직접 소유 및 경영하는 사업 혹은 기업을 의미한다.

었다. 이러한 관심은 정치적 자유화가 가져온 결사의 자유와 더불어 대만사회 내에 각양각색의 비영리조직을 양산시켰으며, 시민사회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시민사회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시민사회의 국가에 대한 대립적 요소를 강조하기 보다는 시민사회의 ‘공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개념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대만의 지식인들은 하버마스의 ‘공공영역’ 개념에서 유추된 ‘공민사회’라는 용어를 ‘민간사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용어로 선택하였는데(顧忠華, 1999), 이는 매우 중요한 정치사회적 함의를 담고 있다. 대만은 민주화 이후 사회의 ‘보수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시민사회의 대립적 투쟁에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의 역동성이 상실되고, 거시적 담론 창출이나 전국적인 동원이 매우 심각한 침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시민사회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대립적 투쟁을 암시하는 ‘민간사회’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공민사회’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공민사회’라는 개념은 ‘민간사회’가 가지고 있던 운동지향적이고, 전투적인 성격을 약화시켰다. 또한 국가와 더불어 혹은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영역의 공적 활동에 대한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전국적인 거시담론의 창출이나 사회적 동원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III. 국가/시민사회의 관계 변화

민주화 이전,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국가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서 시민사회는 거의 압살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당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국민당 정권은 '당국체제' 하에서 중국공산당과 거의 유사한 방식, 즉 '당국체제'와 '민주집중제'를 통해 대만을 통치해 왔다. “당이 모든 정치를 영도한다(以黨領政)”는 원칙하에, 정책의 제정권은 국민당의 수중에 있었다. 또 민주집중제의 원칙하에, 국민당의 모든 의사결정은 소수로 구성된 중앙상무위원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당 최고지도자인 당주석의 의지가 거의 모두 관철되었다. 따라서 정부조직은 단순히 당의 정책결정을 이행하는 하부기관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정부기관의 각 단위마다 당의 조직원이 파견되어 있거나, 당 조직의 지휘를 받았다. 그 외 사회의 거의 모든 조직에도 당 조직이 침투되어 있었다. 특히 학교조직 내에도 당 조직이 설치되어, 학생들의 당원가입을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동태를 완벽하게 감시하였다. 또 국민당 정권은 대만 본토에서 자생적으로 탄생된 본토정권이 아니라

대륙에서 이주해 온 ‘이민정권’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회통제와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동원을 위해 독특한 지배전략을 구사하였다. 즉 국민당 정권은 전면적인 사회통제를 위해 사회의 기층조직에까지 당의 조직을 뿌리 깊게 침투시켰으며, 이러한 조직에 기초하여 대다수의 민중을 장악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 ‘성급(省級)’ 행정단위에는 ‘성급 지구당(省黨部)’, 각 ‘현(縣)’ 및 ‘시(市)’에는 ‘현 및 시급 지구당(縣市黨部)’, ‘구(區)·‘향(鄉)’ 및 ‘진(鎭)’에는 ‘구급 지구당(區黨部)’, ‘촌(村)’ 및 ‘리(里)’에는 ‘소조(小組)’, 그리고 ‘린(鄰)’에는 ‘당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국민당정권은 중앙에서 지방의 최소 기층단위까지 엄밀하고, 수직적인 조직체계를 운용함으로써, 대만 향촌의 기층사회에 까지 직접 침투할 수 있는 지배의 연결망을 형성시켜, 중앙당과 중앙정부에 의한 조직적이고, 수직적인 직접통제 전략을 구사하였다(龔宜君, 1995: 117; 박윤철, 2007).

둘째, 국민당정권이 대만으로 이주한 후에, 정권의 담당자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체제를 표방하고, 자본주의적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기초를 직접 통제함으로써, 이민정권의 태생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당국(黨國)자본주의’⁴⁾라는 독특한 체제를 유지하였다(陳師孟, 林忠正 등, 1991). 국민당 정권은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정권과는 달리 경제적 자원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다. 즉 ‘공영(公營)’과 ‘당영(黨營)’사업 및 기업 등을 통해 2차 산업과 금융서비스 등에 직접 참여하였다. 광복초기 대만의 공영과 당영 사업 및 기업 규모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방대하였는데, 거의 모든 산업부문이 공영과 당영 사업 및 기업에 의하여 장악되었다(張晉芬, 2002).

셋째, 국민당 정권은 대만으로 이주한 후, 국민당 및 국가기구 조직의 운용만으로는 지방의 기층 민중을 통제하는데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또 다른 지배전략을 구사하는데, 이것은 지방 세력의 핵심을 이루는 ‘지방파벌(local faction)’⁵⁾과의 ‘후원수혜관계(patron-client relations)’를 통해 ‘분할지배(divide and rule)’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정부⁶⁾의 공권력과 ‘공

4) 대만의 당국(黨國)자본주의는 당국지배체제하에서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민간자본은 종속적 위치에 있는 국가자본주의의 일종으로서, 특히 국민당이 경제적 생산영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형적 자본주의체제를 가리키는 말인데(陳師孟, 林忠正 등, 1991), 대만사회 내에서는 국민당의 경제에 대한 독과점을 비판하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5) 중국대륙에서 국민당과 함께 이주해 온 ‘외성인’은 주로 북부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자원을 독점하였다. 그러나 지방에는 ‘외성인’이 거의 거주하지 않았으며, 지방의 토호인 ‘지방파벌’을 중심으로 사회적 자원이 통제되었다.

6) 국민당정권은 1950년, 즉 대만으로 이주한 직 후, “현 및 시”급 자치단체수장과 의회의원, 그리고 성(省)의회의원을 직접선거로 선출하였다.

영'과 '당영' 사업 및 기업을 이용하여 경제적 자원을 창출하고, 이를 지방 엘리트들에게 제공하거나, '지방과별'이 운영하는 사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廖忠俊, 1997: 80-96). 그러나 국민당 정권은 '지방과별'이 지방적 사무를 벗어나 중앙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철저히 제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대륙의 군사적 및 정치적 위협은 국민당의 폭압적 통치를 가능하게 해 주는 반공주의의 구체적 실체로 작용하였다. 실제로 1958년에서 1960년대 초반까지 대만의 통제 하에 있는 '푸젠성(福建省)' 일부지역에 대한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공격이 있었다. 대만에 비해 훨씬 강대한 무력을 지닌 중국 대륙의 위협에 대해 대만인들이 느끼는 위압감은 한국인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컸다. 따라서 국민당 정권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사회적 통제를 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였다. 한국에서와 같이 '반공 이데올로기'는 정치사회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으며, 개인적 삶의 영역에까지 깊게 침투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은 국민당의 독재적 당국지배체제 하에서, 시민사회가 국민당 정권에 도전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이러한 국민당 지배체제의 민주적 전환을 위한 사회구조적 조건의 변화가 점점 성숙해 가고 있었다. 첫째, 대만사회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진전에 따라 급격한 사회구조 변천을 경험하였다. '중산계급'은 수량이나 그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주도적 사회계급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노동계급' 역시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성숙과 더불어 그 양적인 면에서 획기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또 자본계급은 국민당에 의한 공영 및 당영 체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는 하였지만, 국민당의 공영 및 당영 체제를 밀어내고, 경제영역의 독점적 주체로 성장하였다. 대만의 '자본계급'은 중소기업 위주의 발전 형태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방대한 공영체제로 인하여, 한국에 비해 그 경제적 독점 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2004년 현재 100대 재벌기업의 매출총액이 GNP의 137.57%에 이르고 있다(中華徵信所, 2008). 한편, 대만은 유엔에서의 축출과 미국 및 일본과의 단교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국제적 고립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거의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이는 곧바로 국민당정권의 정당성 위기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객관적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실제로 '중산계급'과 '노동계급'의 조직적 역량을 동원한 민주화 요구가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또 '자본계급'의 경제자유화 요구 속에, 국민당 정권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은 날로 약화되었다. 따라서 국민당 정권은 계엄령을 해제하고, 반대정당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민주적 개혁조치

를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시민적 자유는 상당한 정도로 신장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동원 및 반란평정시기 인민단체법(動員戡亂時期人民團體法)’에 의해 극도로 제한되어 있던 ‘결사의 자유’가 확대됨으로써, 시민사회 조직의 급속한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민주화 투쟁도 상당히 활성화되었다(Chu, 1992). 예를 들면, 만년국회의 해산, 총통직선제 및 공안사건 반대운동 등에서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 수준은 상당한 것이었으며, 결국은 국민당 정권의 개혁을 이끌어냈다. 시민운동은 또 90년대 지속적으로 진행된 ‘이란현(宜蘭縣)의 핵발전소 건립 반대운동’ 등에서 상당한 수준의 동원능력과 결집력을 보여주었다(何明修, 2000).

1986년 계엄령이 해제된 후에 노동자의 자주적 노동조합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고양되었다. 이 때 전통적 시민사회 조직인 노동조합은 국민당 정권의 ‘국가조합주의’ 틀을 벗어나 자주적 노동조합의 성장 가능성을 일부 보여 주었다. 2000년 4월, 실제로 ‘당국체제’하에서 국민당의 통제를 받으며,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전국총공회(全國總工會)’의 대표(理事長)선거에서 국민당이 지지하는 후보가 패배하고, 노동당과 상대적으로 밀착된 후보인 린후이관(林惠官)이 선출되었다. 이는 50여 년간 국민당의 통제 아래 있던, 노동조직이 자주성을 발휘하는 시발점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단일 노조의 독점적 구조를 타파하고, ‘전국산업총공회(全國產業總工會: Taiw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와 ‘전국노공총회(全國勞工總會)’⁷⁾ 등의 독립적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으며, 노동부문의 요구가 상당한 수준에서 실현되었다. 그러나 사회운동은 주로 구사회운동인 노동운동이 아니라 민주화시기 광범위하게 시작된 신사회운동에 의해 주도되었다. 예를 들면, ‘반공해 자력구제운동’, ‘생태보호운동’, ‘소비자운동’, ‘장애인 등을 포함하는 복지취약단체의 향의운동’, ‘원주민인권운동’, ‘교사인권운동’, ‘학원자치운동’, ‘부녀운동’, ‘정치수난자 인권운동’, ‘노병귀향운동’⁸⁾, ‘노병복지 및 자력구제운동’, ‘신약교회 향의운동’ 등이 그것이다(蕭新煌, 1989). 신사회운동의 운동 목표는 표면적으로는 생활세계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개혁에 대한 강한 열망을 담고 있었다. 특히, 지식인단체들이 주도한 정치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환경운동 조직이 지방 하부조직과의 긴밀한 연

7) ‘전국산업총공회’는 ‘민주진보당’의 지지를 받는 전국노동조직이고, ‘전국노공총회’는 단일노조였던 ‘전국총공회’의 대표선거에서 패배한 국민당 계열의 조직들이 탈퇴하여 조직한 전국노동조직이다.

8) ‘외성인’(外省人)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퇴역군인들의 중국대륙 고향방문을 실현하려는 운동.

계 하에서 수행한 동시다발적인 환경운동은 권위주의체제의 민주적 전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Reardon-Anderson, 1992 ; 何明修, 2000).

한편, 제1야당인 ‘민주진보당(民主進步黨)’을 포함하는 정치적 반대운동 조직들과 신사회운동 조직들 사이에는 강력한 ‘선택적 친화성(elective affinity)’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암묵적 합의가 민주화의 방향타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사회운동의 지도자들은 야당 및 비판적 지식인 단체 및 그룹들과 가장 원활한 인적 교류와 정책적 연대를 통해, 민주화를 견인하였다(何明修, 2000).

결론적으로, 민주화시기 국가/시민사회 관계는 극적 재구조화의 과정을 거쳤다. 시민사회운동세력과 야당인 ‘민주진보당’은 지속적인 동원과 투쟁을 통해, 분열된 국민당 지배체제를 공략하여, 마침내 국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사상 초유의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를 이룩함으로써, 국가와 새로운 관계설정을 필요로 하는 시민사회의 건설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IV. 시민사회의 양적 성장

1980년대 말 대만의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 전체적인 시민사회 조직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대만 시민사회의 양적 성장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활성화되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사단(社團)’과 ‘기금회(基金會)’⁹⁾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다. 민주화 초기인 1996년 현재 사단법인 조직형태인 ‘사단’은 11,788개에 이르며, ‘사단’ 중에서 60% 이상이 8,90년대에 성립된 것인데, 이는 80년대 이후 대만의 시민사회가 얼마나 활발히 성장했는가를 보여준다. 사단법인 중에서 사회서비스, 공익단체 및 자선조직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비중은 약 30%에 이른다. 그 다음이 학술, 문화 및 국제교류 조직인데, 이 또한 약 30% 전후이다(蕭新煌, 1999b). 그러나 공익조직이라고 하기 어려운 친목단체 형태의 조직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만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회조직이 있는데, 그것은 재단법인 형태의 ‘기금

9) 대만의 시민사회 조직들을 조직형태에 의거하여 분류하면, ‘사단법인(社團法人)’조직과 ‘재단법인(財團法人)’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보통 중국어로 ‘사단(社團)’이라 부르며, 소속 회원을 조직의 핵심으로 삼으며, 후자는 대부분 ‘기금회(基金會)’로 구성되어 있다. 대만의 ‘기금회’는 기금을 기본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의 사회조직들이 법률적 지위를 얻기 위해 선택하는 조직형태로 대부분 이용되고 있으며, 이것이 대만 시민조직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가 되고 있다.

회'이다. '기금회'는 표면적으로는 기금을 관리하는 조직이며, 조직인원은 소수이다. 그러나 대만 사회 내에서 '기금회'는 상대적으로 설립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단'을 조직하고자 하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금회'를 설립하여, 실제로는 사단의 일반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대만의 '기금회'는 중요한 비영리기구의 하나로써 인정되고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기금회'의 숫자는 2002년의 통계에 의하면, 2,918개에 이르는데(蕭新煌, 2003), 70% 이상이 80년대 이후에 비로소 성립된 것이다. 이를 주요 활동목표 면에서 나누어 보면, '기금회'는 사단법인 조직과 유사하게, 문교, 복지 및 자선 관련 '기금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의료위생, 환경보호, 경제발전, 국제문화교류 및 사회개혁운동 관련 '기금회'이다. 대만의 '기금회'는 조직의 수량 면에서는 실제로 사단법인 형태의 '사단'에 훨씬 미치지 못하나, 그 사회적 활동영역이나 자발적 참여란 측면에서 '사단'에 버금가는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

대만 내정부(內政部: 한국의 행정자치부에 해당) 통계처의 2가지 통계, 즉 '2008년 인민단체개황(人民團體概況)'과 '전국성인민단체수(全國性人民團體數)'(표1 참조)를 통해, 대만 '사단'의 양적 성장을 추적해 보면, 그 급속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1996년 대만의 전체 '사단' 수는 11,788개였으나, 2008년 말 현재 31,994개로 거의 3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 전국 수준의 '사단' 수는 1996년 2,390개에서 2008년 말 현재 8,542개로 3.6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시민사회 내에서 시민의 자발적 결사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마치 결사체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양산되기 시작한 '사단'들을 성격 면에서 나누어보면, 대체로 운동성이 배제된 '비영리조직(NPO)'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에 설립된 '사단'들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범주 내에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사회운동의 방향은 시민사회의 국가에 대한 비판이나 대립적 역할보다는 공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욕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갔다. 이러한 주제들은 전국적인 공공이슈라기 보다는 지역적 혹은 지방적 문제이며, 동시에 생활세계 혹은 사회복지 수준의 문제들이다. 이는 민주화 이후 사회운동은 운동성이 퇴색되고, 서비스적인 면이 강한 운동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표1 : 대만의 전국 수준 사회단체 통계

연도	사회단체								
	합계	학술 문화 단체	의료 위생 단체	종교 단체	체육 단체	사회 서비스 및 자선 단체	국제 단체	경제 업무 단체	동향, 향우회 및 기타 단체
1992	1,536	447	155	87	143	227	105	311	61
1993	1,740	490	167	109	160	283	101	354	76
1994	2,011	546	197	135	180	343	110	440	60
1995	2,275	578	221	171	197	426	117	496	69
1996	2,390	606	248	158	249	408	114	499	108
1997	2,668	639	269	232	272	450	125	551	130
1998	2,897	684	300	244	286	510	131	601	141
1999	3,279	754	315	269	340	607	133	687	174
2000	3,964	972	358	323	402	774	129	804	202
2001	4,407	1,049	390	355	443	918	130	899	223
2002	4,930	1,173	426	397	486	1,049	136	990	273
2003	5,467	1,295	471	455	531	1,135	142	1,109	329
2004	5,997	1,428	514	524	574	1,239	147	1,203	368
2005	6,565	1,570	591	574	624	1,345	149	1,321	391
2006	7,150	1,707	641	633	668	1,475	161	1,443	422
2007	7,796	1,838	698	683	718	1,661	166	1,546	486
2008	8,542	1,960	751	750	779	1,872	170	1,678	582
2009/6	8,910	2,026	775	788	826	1,951	174	1,736	634

출처: 대만 內政部 통계자료(2009).

V. 시민사회 발전의 구조적 한계

1990년대 초반 상당한 돌풍을 일으켰던 시민사회 운동은 대만의 사회적 조건과 사회운동의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의식화된 사회조직을 형성 시키는데 한계를 드러내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한 수준으로 실현된 이후, 시민사회 운동은 오히려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전국적 혹은 전국민적 수준의 이슈와 동원을 창출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시민사회 발전의 구조적 한계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정치사회적 조건이 야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먼저, 대만의 정치민주화는 국가체제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위로부터의 국가 주도적 개혁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즉 국민당 정권은 한국처럼 시민사회의 요구에 굴복해서라기보다는, 선점적 지배전략의 일환으로 권위주의 지배체제의 완화에

동의하였다. 다시 말하면, 대내적으로 경제발전의 결과로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룩한 중산계급이 주도하는 시민적 요구를 사전에 봉쇄하고, 대외적으로 유엔에서의 축출과 미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대륙과 국교를 정상화한 것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확립에 적응하기 위하여, 국민당 정권이 능동적으로 개혁적 조치들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민주화를 통해 기존의 사회경제적 독점체제가 와해되지 않고, 독점체제 내의 각 세력, 즉 국가, 자본 및 지방파벌이 새롭게 합종연횡(合從連衡)하는 자기조정 과정을 통해, 기존의 독점체제를 변형적으로 재편함으로써 기득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탈독점화는 상당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사회경제적 담론영역에서조차 사회운동이 신독점체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둘째, 민주화시기 ‘대만독립파’와 ‘대만독립반대파’는 민주화라는 대의명분 하에 서로 단일한 대오를 형성하여 국민당의 당국체제를 와해시켰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진보당’과 개혁된 ‘국민당’을 중심으로 재결집되었다. ‘대만독립파’는 ‘민주진보당’을 중심으로 ‘녹영(綠營)’을 형성하였으며, ‘대만독립반대파’는 ‘국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남영(藍營)’을 형성하였다¹⁰⁾. 그들 양자는 정치사회 의식에서 현격한 견해 차이를 노출하며, 갈등을 현재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적 대립구조는 대만의 시민사회에 이분법적인 분열을 야기하여, 사회운동의 내부단결이나 아젠다 혹은 운동목표의 설정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공공적인 시민사회 이슈들조차 양자의 대립으로 인하여 정치화되어, 접점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셋째, 대만 중산계급은 대만사회의 특수한 조건들로 인하여, 사회적 성격형성에 있어 한국과 상이한 궤적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는데도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만사회는 자본주의 공업화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과 같은 국가체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 전통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산계급의 양적 성장에 상응하는 정치사회적 자유화를 요구할 의식화나 조직화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신중산계급’은 민주화 과

10) ‘녹영(綠營)’은 ‘민주진보당’을 상징하는 ‘녹색’에서 출발하였다. 그들은 ‘민주진보당’을 지지하며, ‘대만독립’을 선호한다. 그들은 ‘중화주의’를 혐오하며, ‘대만의식’이 매우 강하다. 또 그들의 주요 지지 세력은 남부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대만의식’이 강한 ‘본성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남영(藍營)’은 ‘국민당’을 상징하는 ‘남색’을 빌려 명명되었다. 그들은 ‘국민당’을 지지하며, ‘대만독립’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현상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자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중국 문화에 대한 일체감이 상대적으로 강하며, 따라서 대만의식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들의 지지 세력은 북부지역에 주로 거주하며, 대만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본성인’과 북부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외성인’들이 주를 이룬다. 이들의 대립은 기본적으로 ‘본성인’과 ‘외성인’의 ‘민족적 균열(ethnic cleavage)’과 동일 선상에 있다.

정에서는 상당히 통일된 정치적 태도를 보여주었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녹영(綠營)’과 ‘남영(藍營)’으로 분열되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중소기업 위주의 ‘영세화된 산업구조’ 하에 양산된 ‘구중산계급’의 보수화이다. ‘구중산계급’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체제를 지속하고자하는 보수성을 띤다. 그러나 대만의 ‘구중산계급’은 대만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으로 인하여 권위주의시기에 상당한 진보성향을 보여주며, 사회운동의 사회적 동원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이들은 상당한 인구와 경제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대만의 민주화 과정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만 ‘구중산계급’의 특이한 진보성의 원인은, 피지배 계층이었던 대만본토 출신인 ‘본성인’(本省人)이 ‘구중산계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중국대륙 출신인 ‘외성인’(外省人)이 주도하는 ‘당국체제’ 하에서 배제된 채, 민간경제 부문에서 독자적으로 성장한 계급이기 때문에, ‘외성인’ 위주의 당국지배 체제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를 통해 정치 및 사회 각 영역에서 ‘본성인’의 주류화가 이루어지고, 경제문제가 사회적 핵심이슈로 떠오르자, 기존의 진보성을 상실하고, ‘구중산계급’ 특유의 보수성을 회복하였다. 이는 사회운동 진영의 사회적 동원 기초의 약화를 의미한다.

넷째, 대만의 ‘노동계’급은 ‘국민당의 외곽조직’ 수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자신의 양적 성장에 상응하는 질적 성장을 실현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영세화된 산업구조’로 인하여 대형노조의 형성이 어렵고, 노동계급의 의식화를 선도해 줄만한 엘리트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대만은 공업화가 시작된 이후에 의미 있는 노동운동의 전통이 거의 축적되지 않았으며, 1986년 계엄령이 해제된 후 노동자의 자주적 노동조합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고양되었으나, 실제로 조직화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王振寶, 1993; 김준, 1993). 특히 1985년 5월의 ‘원둥(遠東)화섬 파업사건’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으며, 이는 대만에서 단기간 일어났던 노동운동 열기의 종말을 고하는 사건이 되어 버렸다(趙剛, 1996). 그 이후에도 노동조직은 권위주의시대의 국가통합주의의 틀을 완전히 깨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조직 동원능력이나 동원성과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직화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黃長玲, 2003; 王振寶, 1993; 김준, 1993). 그러므로 조직화된 대중동원을 필요로 하는 노동투쟁이나 대형 파업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¹¹⁾ 실제로 노동운동은 전국조직의

11) 민주화시기 의미 있는 대형파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1988년 2월과 1989년 5월의 위안둥(遠東)화섬의 파업이었으나, 실패로 끝났으며, 이는 대만에서 민주화시기 단기간 일어났던 노동운동 열기의 종말을 고하는 사건이 되었다(趙剛, 1996). 그 이후로 대만 노동운동사에 기록될만한 대형파업은 거의 없었다.

복수화에도 불구하고, 단위사업장 수준에서의 조직화조차도 유의미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1990년대 이후, 대만의 노동운동은 매년 진행되는 ‘춘투(春鬪)’ 및 ‘추투(秋鬪)’에서조차 수 천 명을 동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체제에 저항하기 보다는 기존의 체제 내에 존재하는 통로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전략을 채택하거나(黃長玲, 2003: 78), 민주화에 따른 정치기회구조의 확대를 활용하여 체제에 편입되는 길을 더 선호하고 있다(郭國文, 2003). 따라서 노동운동 역시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주요한 한 축이 되기는 쉽지 않다.

다섯째, 대만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민사회 운동의 전통이 일천하여, 시민사회 운동지도자의 외연이 매우 좁다. 이는 곧 바로 대만 시민사회운동의 발전에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어왔다. 다시 말하면, 민주화이후 특히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이후 사회운동 지도자들이 거의 대부분 정치영역으로 이동하자, 시민단체 중에서도 전국적 이슈나 거대담론을 창출하는 운동지향적 시민단체 지도자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다. 따라서 운동지향적 시민단체가 주도하던 대만의 사회운동은 그 구심점의 상실로 인하여 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吳介民, 2002). 그리고 정치영역으로 이동한 사회운동 지도자들은 점차 보수화되어, 오히려 시민사회 조직의 정책적 대안이 반영되는 통로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여섯째, 지방 수준의 사회운동은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지방파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지방의 사회운동이 ‘지방파벌’의 ‘정치운동’과 혼합됨으로써, 애초 사회운동이 가지고 있던 공공성이 상실되어 사회운동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사회운동이 ‘지방파벌’의 정치적 동원에 이용됨으로써, 지방정치 운동의 수단화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곱째, 대만 시민사회 발전에서도 ‘중국변수’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정치적 및 군사적 위협은 대만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안정에 매우 민감하도록 만든다. 그들은 대만의 진보적 투쟁들이 중국대륙을 자극하여 정치적 및 군사적 긴장관계를 증폭시킴으로써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까 매우 두려워한다. 또 대만 경제의 지속적인 대중국 의존 심화는 대만경제의 중심축을 중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중국의 경제적 ‘통일전선전술’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만 국민들은 대만과 중국의 대립이 직접적으로 대중국 투자기업의 이익을 손상시키고, 나아가 대만 경제 전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우려는 시민사회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술한 경제적 이익의 손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정치사회적 조건과 더불어 대만인의 ‘현세주의적인 성격’, 즉 명분보다는 현세적 부의 추구를 우선시하는 사회문화적 성격과 서구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개인주의 및 소비주의 등은 개인을 파편화시키고, 공공이익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민주화의 핵심 주도세력이었던, 중산계급으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과 체제안정에 경도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시민사회 발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1990년대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한 정도로 완성된 후, 대만의 시민사회 운동은 민주화 초기의 운동성을 상실하고, 지역적이거나 생활세계적인 문제로 경도되었다. 시민조직의 상당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운동성 조직은 쇠퇴하고, 비운동성의 비영리 조직인 대만 특유의 ‘기금회’ 조직이나 지역적 조직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들은 상당히 풀뿌리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전국적인 정치적 이슈에는 그다지 관심도 없으며, 전국적인 동원능력도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즉 이러한 대만의 사회운동 조직들은 대부분이 지역적 및 지방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참여연대’ 혹은 ‘경실련’같이 전국적 영향력을 갖고 전국적 담론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사회 조직의 조직화 수준이나 동원역량은 많은 한계가 있다. 한편, 대만 시민운동에서 민주화 초기에 성행하던 시민운동의 연맹화 전략도 미미해졌다. 민주화의 절박성이 완화되자 대부분의 연맹체는 해체되고, 사회운동 조직들은 지역적 및 지방적 조직으로 회귀하거나 유명무실해졌다(박윤철, 2003). 이 시기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환경운동 조직의 경우 지금도 여전히 전국적인 조직이 있으나, 이 전국적 조직은 애초에 지방 환경운동 조직들이 필요에 따라 결성한 전국연합체에 불과하다.

전국적 이슈가 존재하지 않고, 전국적 수준의 동원이 어려운 상태에서, 국가사무에 개입하거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시민사회의 압력 수준이 국가의 독점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만에서는 현재 환경운동 정도에서만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의 시민사회 조직이 전국적인 거대 담론을 창출하여 정치사회적 독점구조 완화에 영향을 미치고, 분권 혹은 분점과 다원화를 추동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Ⅵ. 동아시아 시민사회와의 연대에 대한 전망

민주화 이후, 대만 시민사회의 역사적 및 구조적 조건으로 인하여 사회운동의 ‘지역화’, ‘지방화’, ‘풀뿌리화’, ‘소규모화’ 및 ‘사회서비스화’ 현상이 야기되었다. 더 부정적으로 말하면, 시민운동은 점차 ‘왜소화’, ‘고립화’ 및 ‘파편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대만의 시민사회의 조직적 역량은 약화되었으며, 동시에 거시적 담론이나 전국적 이슈를 창출하는데 상당히 무관심하게 되었다. 물론 대만 시민사회 내에 거시적 담론이나 전국적 이슈를 추구하는 시민단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들은 국내적 거시 담론을 넘어 국제적 담론의 창출에도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러한 시민단체는 거의 대부분이 진보적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중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동아시아적 연대의 형성에는 소극적일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들은 대만의 이원적 정치대립구조 하에서 반통일 혹은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녹영(綠營)’과 정치적 태도를 공유한다. 따라서 그들은 중국의 중화주의 및 쇼비니즘(chauvinism)적 태도에 거부한다. 그래서 그들은 진보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공산당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에서 중국의 견제로 인하여, 대만의 독자적 역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믿는다. 나아가 중국의 종속적 위치에 처하거나 혹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적 논리에 지배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다음,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중화주의 및 쇼비니즘적 태도와 정치적 및 군사적 위협으로 인하여, 진보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녹영(綠營)’은 중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만경제의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보수진영인 ‘남영(藍營)’은 중국과의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대만사회 내의 대립구조로 인하여, 중국과의 경제공동체 형성 문제에서 ‘녹영(綠營)’과 ‘남영(藍營)’이 합일점을 찾는 것이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녹영(綠營)’과 ‘남영(藍營)’이 단기간 내에 중국과 함께하는 동아시아적 사회문화 공동체 구축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셋째, 대만 국민들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적 통치체제의 수립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확립해 준 것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있다. 또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대륙으로부터 온 이민정권의 폭력적인 식민통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특별히 식민통치라는 이유로 일본에 대해 더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나아가 일부 대만 국민 혹은 사회운동 지도자들은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시민사회와는 상당히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강한 경쟁 심리와 한국의 중국 경도에 따른 대만 홀대 등으로 인하여, 대만은 한국에 대하여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대만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진영 간의 간헐적으로 친목적인 수준의 교류는 있지만, 동아시아적 연대를 위한 거시적 담론의 교환으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7년 대만정부가 핵폐기물을 북한에 수출하려고 했던 사건을 통해 대만과 한국의 환경운동 단체들은 동아시아 차원의 연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기회를 맞이하였지만, 단발성 협력에 머무르고 장기적 연대의 틀을 확립하지는 못하였다. 또 대만의 민주화 이후, 자주적 및 진보적 노동조합총연맹으로 ‘전국산업총공회(全國產業總工會)’이 설립되었다. 그들은 한국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한국 노동운동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한국과의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단순한 교류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에 한국의 ‘창작과 비평’과 대만의 ‘대만사회연구계간(臺灣社會研究季刊)’ 간에 ‘동아시아공동체’와 같은 주제로 매우 활발한 학술 및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대만 주류학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넷째, 대만은 25년의 역사를 가진 ‘대만인권촉진회(臺灣人權促進會)’ 등의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인권’에 대한 강한 관심을 가진 전통이 있다. 실제로 대만은 ‘소수자인권보호운동’ 방면에서 한국에 비해 상당히 선진적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이 인권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적 담론을 창출하고 이를 확대해 나간다면, 동아시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러한 사회적 노력이 아직은 관찰되고 있지 않다.

한편, 대만은, 중국이 자신의 국제적 활동을 견제하고, 심지어 봉쇄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의 통제 하에서 대만의 역할 공간을 허용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악조건 속에서 여러 가지 활로를 찾고 있다. 이런 조건 하에서 대만의 시민사회는 비록 중국의 주권이 미치고 있지만, 중국정부의 영향력을 거의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정부에 저항하는 홍콩 시민사회와의 연대에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간의 활발한 교류 및 연대활동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대만은 중국의 봉쇄 속에서 ‘동북아시아’보다는 ‘동남아시아’와의 연대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1990년대부터 정부주도의 ‘남방정책’이 시도되었는데, 이러한 정부의 지원 하에서 대만의 시민사회와 학계는 ‘동남아시아’와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또 ‘동남아시아’는 화교들이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대를 통해 좀 더 용이하게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물론 동남아에서도 중국의 견제가 작용하지만,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부터 굳건하게 형성된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연대가 그러한 중국의 견제를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대만 사회 내에서 가장 큰 학술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도 가지고 있는 총통부 직속의 ‘중앙연구원(Academia Sinica)’ 산하에 있는 ‘아태연구센터’도 그 명칭과는 달리 동북아에 대한 연구나 교류는 미미하고, 오히려 동남아에 대한 연구나 교류는 매우 활발하다.

Ⅶ. 나오는 말

민주화 시기, 대만 시민사회는 자신이 가진 특수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보편적 정치사회적 투쟁과 더불어 특정한 전략을 선택하여 시민사회를 발전시켜 왔다. 민주화 시기 대만 시민사회가 선택한 ‘민간사회’라는 개념은, 당과 국가가 일체화되어 사회전반이 거의 국가화 되어 있는 조건 속에서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동원을 위한 담론으로 작용하였다. 민주화로 인한 사회의 구조적 변천이 진행됨에 따라, ‘민간사회’라는 담론은 더 이상 정치사회적 동원전략으로 유효하지도, 또 시민사회적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는 ‘공민사회’라는 용어로 개념화되었다. 이는 시민사회가 투쟁의 장이 아니라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장이라는 점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정치사회적 동원을 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민주화 이전, 대만의 시민사회는 국민당 정권의 ‘당국체제’ 하에서 거의 압살상태에 있었다. 국민당 정권은 압도적인 국가기구를 동원하여 시민사회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으며, ‘당국자본주의’라는 독특한 기제를 통해 경제적 자원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였다. 지방은 국가기구에 의한 직접지배와 지방파벌의 활용을 통한 간접지배를 병행하고 있었다. 또 거대한 중국대륙의 군사적 위협은 ‘반공이데올로기’라는 이념적 도구를 이용한 사상적 지배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 그러나 경제발전으로 인한 자본, 중산 및 노동 계급의 성장으로 민주화 요구가 거세어졌고, 유엔에서의 퇴출과 미국 및 일본과의 단교와 같은 국제적인 고립으로 인하여 국민당정권이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하자, 체제의 민주적 전환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민주화에 따른 결사자유의 확대는 시민사회의 급속한 양적 성장을 견인하였다. 그러나 대만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조건들은 시민사회의 발전에 구조적인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위로 부터의 개혁적 성격'으로 인하여, 기존의 독점지배체제가 해체되기 보다는 오히려 변형적 재편을 통해 새로운 독점체제로 전환되었다.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녹영(綠營)'과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남영(藍營)'의 이원적 대립은 시민사회를 분열시켰으며, 사회계급의 보수화는 시민사회 영역의 역동성을 감소시켰다. 또 정권교체와 함께 사회운동 지도자들이 대거 정부로 이동하자, 지도자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으며, 지역적 사회운동은 지방과벌에 의하여 정치적 도구화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의 정치적 및 군사적 위협과 대만 경제의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 심화는 시민사회의 보수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대만인의 현세주의적 성격 또한 이러한 추세의 문화적 조건이 되고 있다.

대만 사회운동의 '왜소화', '고립화' 및 '파편화' 현상으로 인하여, 대만의 시민사회는 거시적 담론이나 전국적 혹은 국제적 이슈를 창출하는 데 무력하다. 따라서 '동아시아공동체' 같은 국제적 연대를 위한 담론의 제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 진보진영의 중국에 대한 적대감 혹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녹영(綠營)'과 '남영(藍營)'의 중국에 대한 상이한 태도는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적 연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대만 국민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경쟁 심리와 한국의 중국 경도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인하여, 시민사회 간의 내실 있는 연대는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대만의 시민사회는 최근까지 동아시아와의 연대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까지 정부의 남방정책에 편승하여 동남아시아와의 연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참고문헌

- 박윤철 (2003). “대만 시민사회의 성장과 비영리조직(NPOs)의 활성화: 대만 특색의 기금회(基金會)를 중심으로.” 권혁태 등. 『아시아의 시민사회: 개념과 역사』. 서울: 아르케출판사.
- (2007). “대만의 정치사회적 독점구조의 균열과 변형.”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12호.
- (2008). “민주화이후 대만 경제독점구조의 재구조화: 국가, 자본 및 지방 파벌의 삼각동맹.” 『중소연구』. 제32권. 제3호. pp. 13-43.
- 조희연 (2007).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하여: 총체적 프레임.” 『동향과 전망』. 2007년 봄. 69호. pp. 11-50.
- Cheng, Tun-jen and Chia-lung Lin (1999). “Taiwan: A Long Decade of Democratic Transition.” in James W. Morley (ed.). *Driven by Growth: Political Change in the Asia-Pacific Region*, Armonk, N. Y.: M. E. Sharpe, pp. 224-251.
- Ho, Ming-Sho (2003). “The Politics of Anti-Nuclear Protest in Taiwan: A Case of Party-Dependent Movement(1980-2000).” *Modern Asian Studies*. 37(3). pp. 683-708.
- (2005a). “Protest as Community Revival: Folk Religion in a Taiwanese Anti-pollution Movement.” *African and Asian Studies*. 4(3). pp. 238-269.
- (2005b). “Weakened State and Social Movement: the paradox of Taiwanese environmental politics after the power transfer.”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4(43). pp. 339-352.
- Hsiao, H. H. Michael (1996). “Social Movements and Civil Society in Taiwan.” in *Copenhagen Journal of Asian Studies*. Sep. 1996. pp. 7-26.
- Hsiao, H. H. Michael (1999) “Environmental Movements in Taiwan,” in Yok-shiu F. Lee and Alvin Y. So (eds.). *Asia’s Environmental Movements: Comparative Perspectives*. N. Y.: M. E. Sharpe. pp. 31-54.
- Reardon-Anderson, James (1992), *Pollution, Politics and Foreign Investment in Taiwan: The Lukang Rebellion*, Armonk, New York: M. E. Sharpe.

- 顧忠華 (1999). 「公民結社的結構變遷：以臺灣非營利組織的發展為例」. 『臺灣社會研究季刊』. 第36期. pp. 123-145.
- (2003). 「社會運動的‘機構化’：兼論非營利組織在公民社會中的角色」. 張茂桂, 鄭永年 主編. 『兩岸社會運動分析』. 臺北: 新自然主義. pp. 1-28.
- 龔宜君 (1995). 『移入政府的滲透能力(1950-1969): 改造後國民黨政權社會基礎的形成與鞏固』. 國立臺灣大學社會學研究所博士論文.
- 廖忠俊 (1997). 『臺灣地方派系的形成發展與質變』. 臺北: 允晨文化.
- 潘惠伶 (2007). 『臺灣反核四運動歷程之政治分析』. 臺北: 國立臺灣大學社會科學院政治學研究所碩士論文.
- 蕭新煌 (1999). 『臺灣的非營利部門現狀, 新動向和未來發展』. 香港: 香港海峽兩岸關係研究中心.
- 蕭新煌 (1999a), 『臺灣的民間基金會 : 組織與趨勢』, 香港海峽兩岸關係研究中心.
- 蕭新煌 (1999b), 『臺灣的非營利部門現狀, 新動向和未來發展』, 香港海峽兩岸關係研究中心.
- 蕭新煌 (2000), 「臺灣非營利組織的現況與特色」, 『非營利部門組織與運作』, 臺北: 巨流圖書公司, pp. 109-27.
- 蕭新煌 (2003), 「自主·創導與影響 : 臺北民間社會組織」, 未發表手稿
- 楊弘任 (2007). 『社區如何動起來: 黑真珠之鄉的派系·在地師傅與社區總體營造』. 臺北: 左岸文化出版社.
- 吳介民 (2002). 「解除克勞塞維茲的魔咒: 分析當前社會改革運動的困境」. 『臺灣社會學』. 第4期. pp. 159-198.
- 王甫昌 (1998). 「族群意識、民族主義與政黨支持: 1990年代臺灣的族群政治」. 『臺灣社會學研究』. 第2期. pp. 1-45.
- 王振寰 (1999). 「邁向常態化政治: 臺灣民主化中統理機制的轉變」. 林佳龍, 邱澤奇主編. 『兩岸黨國體制與民主發展: 哈佛大學東西方學者的對話』. 臺北: 月旦出版社.
- 林國明, 蕭新煌 (2000). 「臺灣的社會福利運動導論: 理論與實踐」. 蕭新煌, 林國明主編. 『臺灣的社會福利運動』. 臺北: 巨流.
- 林佳龍 (1998). 「地方選舉與民進黨政權的市場化: 從威權鞏固到民主轉型, 1946-94」. 陳明通, 鄭永年主編. 『兩岸基層選舉與政治社會變遷』. 臺北: 月旦出版社. pp. 169-259.
- (1999). 「解釋臺灣的民主化: 政體類型與菁英的策略選擇」. 林佳龍, 邱澤奇主編, 『兩岸黨國體制與民主發展: 哈佛大學東西方學者的對話』. 臺

- 北：月旦出版社。
- 林美玲 (1992). 『社會運動與政治勢力的關係：六輕設廠的比較分析』。中央研究院民族學研究所小型研討會。
- 張茂桂 (1997). 「臺灣的政治轉型與政治的族群化過程」。『教授論壇專刊』。第4期。
pp. 37-71.
- 張鐵志 (1999). 『資本主義發展與民主化：臺灣新政商聯盟與國民黨政權維繫』。國立臺灣大學政治學研究所碩士論文。
- 中華徵信所 (2008). 『臺灣地區集團企業研究』。臺北：中華徵信所
- 陳國霖 (2004). 『黑金：臺灣政治與經濟實況揭密』。臺北：商周出版社。
- 陳東升 (1995). 『金權城市：地方派系，財團與臺北都會發展的社會學分析』。臺北：巨流出版社。
- 周素卿，陳東升 (1998). 「基層選舉下的地方政治與經濟利益：以房地產開發為例」。陳明通，鄭永年編。『兩岸基層選舉與政治社會變遷』。臺北：月旦出版社。
- 陳德君 (2002). 『危機與轉機-追蹤萬華大理街社區的空間實踐』。國立臺灣大學建築與城鄉研究所碩士論文。
- 陳幸均 (1999). 『老市中心社區的空間實踐：萬華大理街社區運動的個案研究』。國立臺灣大學建築與城鄉研究所碩士論文。
- 何明修 (2000). 『民主轉型過程中的國家與民間社會：以臺灣的環境運動為(1986-1998)』。國立臺灣大學社會學研究所博士論文。
(2003). 「民間社會與民主轉型：環境運動在臺灣的興起與持續」。張茂桂，鄭永年主編。『兩岸社會運動分析』。臺北：新自然主義。
(2006). 「重構國家與教師的關係：朝向統合主義的利益組織中介」。『研究臺灣』。創刊號，pp. 5-57。
- 何明修，蕭新煌 (2006). 『臺灣全志：社會志，社會運動篇』。南投：臺灣文獻館。
- 夏鑄九，成露茜，陳幸均，戴伯芬 (2002). 「朝向市民城市-臺北大理街社區運動」。『臺灣社會研究季刊』。臺北：唐山出版社。pp. 141-172。

